

연구	08-16
----	-------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총론)

이인권 외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총론)

1판1쇄 인쇄/ 2008년 12월 8일

1판1쇄 발행/ 2008년 12월 12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XXXXXX-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XXXXXX ~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507-9

8,000원

ISBN 978-89-8031-510-9(전3권)

* 제작대행: (주)FKI미디어

1997년 국내의 한 연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물가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환산된 1인당 GDP 수준에 대비해 볼 때 추세선에서 크게 벗어나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차 오일쇼크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물가 상승률은 과거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낮아졌고, OECD 등 선진국 수준의 물가 안정구조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2008년 들어 유가, 수입 원자재 및 곡물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물가 안정이 다시 최우선의 경제정책 과제로 등장하였다.

최근 한 공공기관이 몇몇 OECD 표본국가와 표본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이 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국내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고 언론들이 기사화하였다. 그러나 몇몇 도시의 일부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자료는 사실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국가, 표본도시 및 표본품목을 대폭 확대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69개국의 82개 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가격조사 대상품목은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품목 217개와 브랜드를 지정한 동일브랜드 품목 102개이다. 이들 품목들의 가격조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의뢰하여 2008년 3월에 실시하였다. 기초가격 조사는 KOTRA의 해외 현지 무역관의

주채원들이 담당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연구원과 KOTRA의 공동기획 및 공동연구의 결과물로 한국의 물가구조 및 업종별·품목별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물가 수준을 거시경제적 시각에서 측정해 보고, 세계 주요 도시들의 물가 수준 및 업종별·품목별 가격 현황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의 유가 및 원재료가격의 상승이 각 업종 및 주요 품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주요 품목의 국내외 가격 현황 및 발생요인을 규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가격차이 발생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외 가격차이가 커지면 소비자는 높은 제품가격으로 인해 충분한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 없고, 기업은 고비용·저효율구조에 의한 높은 생산 코스트로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없다. 물가가 높다는 것은 결국 임금 인상압력 등을 포함하여 고비용구조의 원인이 되고, 이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불어 기업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여 산업공동화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국내 투자 부진과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게 한다.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를 포함한 외국 자본의 유입과 외국인 고급 인력들의 유입을 제약하여 경제성장에도 제약요인이 된다. 또한 고물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내수 확대의 큰 걸림돌이다.

이렇듯 높은 물가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과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이러한 복잡한 경제 현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물가·환율·금리 등과의 연계관계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기타 내용들은 체계적인 연구보다는 에피소드 중심

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품목들의 가격이 높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 1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 및 구조를 분석하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물가 수준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 물가의 추이 및 그 구조 분석을 통해 물가변동의 특징 및 요인 등을 도출하고, 구매력평가 기준 GDP 대비 물가 수준의 국제 비교를 통해 국내 물가 수준을 평가한다. 또한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한 거시정책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절에서는 한국의 물가 상승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산업별 물가 상승을 수입 중간투입물 가격 변화, 임금 상승, 노동생산성 변화, 국내 중간투입물 및 수입 중간재의 생산성 변화 등으로 요인들을 분해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생활물가 상승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생활물가, 서민물가의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규명된 다양한 물가의 상승요인으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가격차이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평가한다. 조사대상 도시는 지역별로 고루 선정되었으며, 품목은 물가지수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중치와 상징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본 장에서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품목 217개와 제품의 이질성을 통제하는 동일브랜드 품목 102개의 82개 세계도시별 가격차이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의 비교대상 국가로 OECD 회원국, 주요 경쟁국 등 다양한 소표본을 구성하여 입체적으로 가격차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품목별 사례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21개의 주요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 간 비용구조를 분석하여 국내외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요인들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로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물가 안정 및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문별 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 산업단지 분양가, 재료비 및 금융비용을 중심으로 한 원가구조 개선방안, 유통구조 및 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방안, 그리고 운송 및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진(이인권, 박승록, 최충규, 이태규, 김현중, 김학수, 변양규) 및 외부 연구진(중앙대 이정희 교수, 인하대 김태승 교수) 그리고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인 KOTRA의 양은영 과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연구의 기획 및 총괄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이인권 연구조정실장에게 감사의 뜻을 거듭 전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 담긴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견해이며, 한국경제연구원 및 KOTRA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8년 12월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조환익 KOTRA 사장

제1장. 연구배경 및 내용	11
제2장. 한국의 물가구조	17
제1절 우리나라의 물가구조와 시사점	19
1.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	19
2. 우리나라의 물가 추이	23
3. 정책적 시사점	33
제2절 한국의 물가 상승 결정요인의 분석	35
1. 생산자물가 상승요인	35
2. 생활물가 상승의 결정요인	41
3. 수입물가 상승의 결정요인	47
4. 서민생활물가 상승의 결정요인	51
5. 한국 물가 상승과 생산성 수준의 국제 비교	57
6. 정책적 의미	62
제3장.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과 평가	63
1. 국내외 가격차이의 개념과 측정	65
2. 조사대상 도시 및 품목	66
3.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 및 평가	67
4. 품목별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	75

목 차

제4장. 품목별 사례분석	87
제5장. 유형별 발생요인 및 해소방안	95
1. 원가부문	97
2. 유통부문	117
3. 세제부문	126
4. 물류부문	135

표 1. 소비자물가 상승률 국제 비교	20
표 2.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상승률	24
표 3. 수입물가지수 상승률	25
표 4. 최근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월평균 상승률	28
표 5.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월평균 상승률	29
표 6. 수입물가지수 월평균 상승률	31
표 7. 최근 국제 유가 상승률	31
표 8. 원화 및 달러 기준 수입물가와 환율 상승률	32
표 9. 생활물가 상승의 구성품목별 기여도 및 기여율	42
표 10. 가계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	44
표 11. 수입물가 상승의 구성품목별 기여도 및 기여율	48
표 12. 국제 원유·밀·옥수수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압박 상위 품목군	49
표 13. 서민생활관련 52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 및 기여도	53
표 14. 주요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60
표 15. 환율 기준 물가지수 개관	68
표 16. 구매력평가 기준 물가지수 개관	68
표 17. 환율 기준 부문별 물가지수 개관	69
표 18. 구매력평가 기준 부문별 물가지수 개관	70
표 19. 서울의 부문별 물가 수준	74
표 20. 국내의 가격차이가 큰 품목 수	83
표 21. 산업단지분양가치수 국제 비교(2008년 기준)	104
표 22. 산업단지 월임대료 국제 비교(2008년 기준)	108
표 23. 재료비 연평균 변동률 국제 비교	111

그림 목차

그림 1.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2006년 기준) …	22
그림 2. 교역조건지수의 추이 ……………	27
그림 3. 원자재 국내 및 수입물가 상승률 비교 ……………	29
그림 4. 주요 산업 생산자물가 상승의 결정요인 분해결과 (1990~2000년 기준) ……………	38
그림 5. 주요 산업 노동생산성 초과 임금 상승률(1990~2000년 기준) …	39
그림 6. 주요 산업 생산자물가 상승의 결정요인 분해결과 (2000~2005년 기준) ……………	39
그림 7. 주요 산업 노동생산성 초과 임금 상승률(2000~2005년 기준) …	40
그림 8. 가계소비지출의 항목별 소득계층 구성 ……………	45
그림 9. 가계소비지출의 항목별 가격 상승의 기여율 ……………	46
그림 10. 주요국의 에너지 투입비중 추이(1991~2005년 기준) ……………	58
그림 11. 주요국의 노동시간당 임금지수 추이(1991~2005년 기준) ……	58
그림 12. 주요국의 노동분배율 추이(1991~2005년 기준) ……………	59
그림 13. 세계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도(환율 기준) ……………	71
그림 14. 세계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도(구매력평가 기준) ……	71
그림 15. 세계 도시의 동일브랜드물가지수 분포도(환율 기준) ……	73
그림 16. 세계 도시의 동일브랜드물가지수 분포도(구매력평가 기준) ……	73
그림 17. 가격지수와 1인당 GDP의 추세(환율 기준) ……………	84
그림 18. 가격지수와 1인당 GDP의 추세(구매력지수 기준) ……………	85
그림 19. 제조업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한 상대임금(2006년 기준) …	98
그림 20. 제조업의 상대임금 장기 변화(1980~2006년 기준) ……………	100
그림 21. 단위노동비용의 변화(1980~2006년 기준) ……………	101
그림 22. 산업단지 분양가 및 국민소득 ……………	106
그림 23.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원재료비의 비중 ……………	112
그림 24. 제조업의 재무구조 및 금융비용 부담률 ……………	115
그림 25. 관세율 비교: 일반품목 리스트 기준 ……………	127
그림 26. 관세율 비교: HS 6단위 기준 ……………	127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의 가격차이 해소방안(총론)

제1장
연구배경 및 내용





본 연구는 한국의 물가구조 및 업종별·품목별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상품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구조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1997년 국내의 한 연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물가는 구매력평가기준으로 환산된 1인당 GDP 수준에 대비해 볼 때 추세선에서 크게 벗어나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¹⁾ 그러나 2차 오일쇼크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물가 상승률은 과거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낮아졌고, OECD 등 선진국 수준의 물가 안정 구조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2008년 들어 원유, 수입 원자재 및 곡물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국내 물가 불안이 커지고 물가 안정이 다시 최우선의 경제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소수의 OECD 표본국가와 표본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이 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국내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이를 언론들이 기사화하였다.²⁾ 그러나 몇몇 도시들의 일부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자료는 사실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국가, 표본도시 및 표본품목을 대폭 확대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69개국의 82개 도시를 포함하고 있

1) 이인권·민승규, 『국내외 가격차이 발생요인 분석과 대응방안』, 1997.

2) 서울이 외국인이 살기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에 올랐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007년 6월 ‘머서 휴먼 리소스 컨설팅(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이 세계 143개 도시의 생계비를 조사한 결과, 서울이 모스크바와 런던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경제전문 조사기관인 EIU가 전 세계 132개 주요 도시의 생활비지수를 조사한 결과 서울은 2006년(13위)보다 두 단계 올라 11위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 도쿄(5위), 오사카(6위)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났다.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도시는 오슬로, 파리, 코펜하겐 순이었다. 생활비가 서울보다 더 드는 1~10위가 모두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2배인 4만 달러 안팎의 유럽, 일본 도시들임을 고려하면, 소득 대비 생활비는 서울이 사실상 가장 비싼 도시라는 주장이다.

다. 또한 가격조사 대상품목은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품목 217개와 브랜드를 지정한 동일브랜드 품목 102개이다. 이들 품목의 가격조사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의뢰하여 2008년 3월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물가 수준을 거시경제적 시각에서 측정해 보고, 세계 주요 도시들의 물가 수준 및 업종별·품목별 가격 현황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의 유가 및 원재료가격의 상승이 각 업종 및 주요 품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주요 품목의 국내외 가격 현황 및 발생요인을 규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가격차이 발생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외 가격차이가 커지면 소비자는 높은 제품가격으로 인해 충분한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 없고, 기업은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의한 높은 생산 코스트로 적정 이윤을 확보할 수 없다. 물가가 높다는 것은 결국 임금 인상 압력 등을 포함하여 고비용 구조의 원인이 되고 이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불어 기업의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여 산업공동화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국내 투자 부진과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게 한다.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를 포함한 외국 자본의 유입과 외국인 고급 인력들의 유입을 제약하여 경제성장에도 제약요인이 된다. 또한 고물가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내수 확대의 큰 걸림돌이다. 이렇듯 높은 물가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과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이러한 복잡한 경제 현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물가 환율·금리 등과의 연계관계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기타 내용들은 체계적인 연구보다는 에피소드 중심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

요 품목들의 가격이 높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 1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 및 구조를 분석하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물가 수준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 물가의 추이 및 그 구조 분석을 통해 물가 변동의 특징 및 요인 등을 도출하고, 구매력평가 기준(PPP) GDP 대비 물가 수준의 국제 비교를 통해 국내 물가 수준을 평가한다. 또한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한 거시정책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절에서는 한국의 물가 상승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산업별 물가 상승을 수입 중간투입물 가격 변화, 임금 상승, 노동생산성 변화, 국내 중간투입물 및 수입 중간재의 생산성 변화 등으로 요인들을 분해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일반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생활물가 상승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생활물가, 서민생활물가의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규명된 다양한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평가한다. 조사대상 도시는 지역별로 고루 선정되었으며, 품목은 물가지수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중치와 상징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본 장에서는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품목 217개와 제품의 이질성을 통제하는 동일브랜드 품목 102개의 세계 도시별 가격차이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의 비교대상 국가로 OECD 회원국, 주요 경쟁국 등 다양한 소표본을 구성하여 입체적으로 가격차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품목별 사례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21개의 주요 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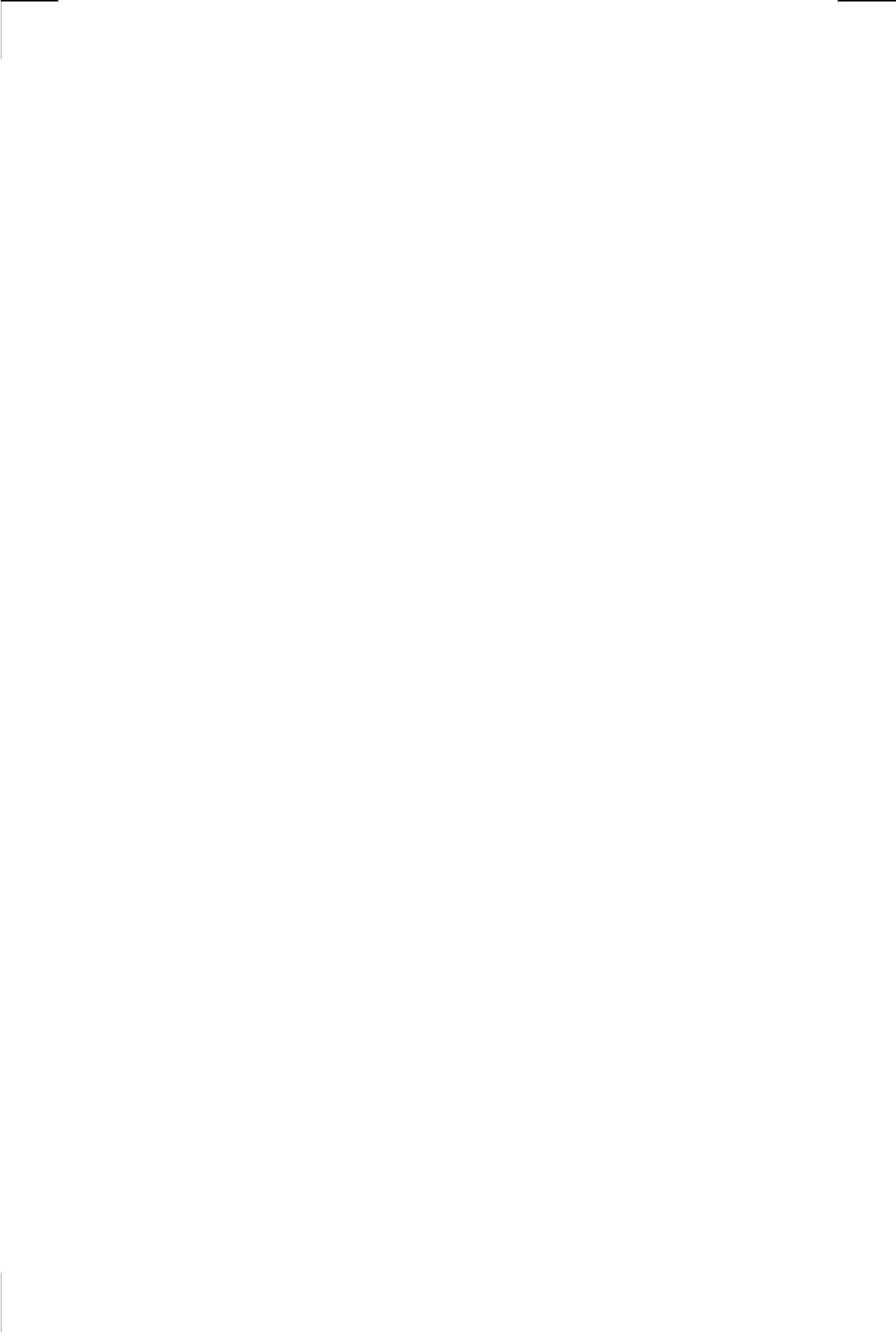
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 간 비용구조를 분석하여 국내외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요인들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로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물가 안정 및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문별 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 산업단지 분양가, 재료비 및 금융비용을 중심으로 한 원가구조 개선방안, 유통구조 및 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방안, 그리고 운송 및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의 가격차이 해소방안(총론)

제2장
한국의 물가구조





제1절 우리나라의 물가구조와 시사점

1.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

(1) 물가 상승률의 국제적 추이

1970년대부터 최근 2007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추이를 G7 및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1970년대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았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선진국에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연평균 증가율은 16.5%로서 G7 평균 8.8%, OECD 평균 9.9%에 비해 월등히 높았지만 이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1981~1990년 기간 동안 연평균 6.4%, 1991~2000년 기간 동안 연평균 5.1%로 점점 낮아져 같은 기간 중 OECD 평균(각각 기간 중 연평균 8.3%, 4.6%)에 하회하거나 가까워졌다. 최근 2001~2007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나타나 같은 기간 중 G7 평균 2.0%, OECD 평균 2.6%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을 보였다. 근래에는 우리나라와 G7 및 OECD 간의 격차는 거의 사라져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곡물가격 및 유가 급증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 10여 년간 중·선진국에서 지속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하락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고

표 1. 소비자물가 상승률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1971~ 1980년 평균	1981~ 1990년 평균	1991~ 2000년 평균	2001~ 2007년 평균	2005년	2006년	2007년
한국	16.5	6.4	5.1	3.1	2.8	2.2	2.5
G7	8.8	4.8	2.4	2.0	2.4	2.4	2.2
OECD	9.9	8.3	4.6	2.6	2.6	2.6	2.5

자료: OECD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 같은 낮은 물가 상승률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세계화를 꼽는 주장들이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세계 무역량이 급증하였고 이와 동시에 물가 상승률의 하락도 뚜렷해졌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즉 세계화의 대표적 현상의 하나로 무역의 증대를 들 수 있으며, 세계 무역이 급속하게 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하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계화가 낮은 물가 상승률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세계화를 통해 직접적·간접적으로 물가 안정의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즉 세계화의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는 무역장벽의 해소이고 이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직접적 효과를 가진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내 기업들은 국제경쟁에 더욱 많이 노출되었고 비용절감, 임금 상승 억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함으로써 제품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는 간접적 효과도 생긴다. 이러한 직접·간접 효과가 합쳐져 전체 가격수준의 상승을 제어하게 된다는 것이다. 간단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를 알아본 결과, 경제 개방도가 높아질수록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찾을 수 있었다. 결국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경제의 개방도³⁾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가설이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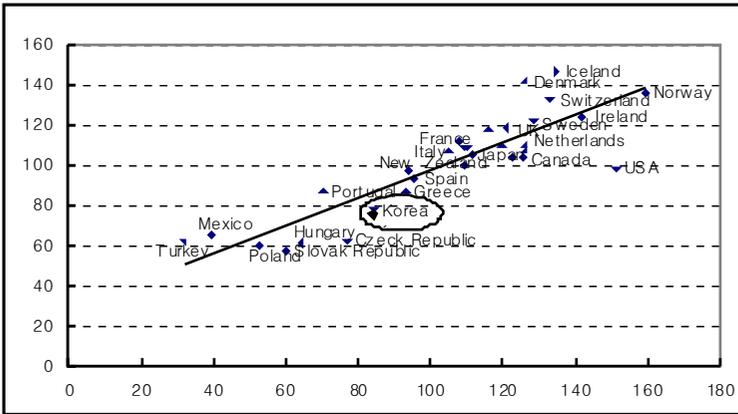
(2)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의 국제 비교

OECD 평균을 100으로 할 때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은 78로서 30개국 중 24번째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아이슬란드가 147로 가장 높고 슬로바키아가 57로 가장 낮다. 한편 단순히 한 나라의 상대적 물가 수준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물가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통상 한 나라의 물가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소득과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물가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설명이 따른다. 개인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그 나라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반면 서비스업을 구성하는 상당수의 상품과 용역은 비교역재이기 때문에 교역재와 같이 무역에 따른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상품 및 용역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전체 물가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림 1>은 1인당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을 두 축으로 하여 OECD 회원국의 2006년 현재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룩셈부르크와 같이 국민소득에 비해 물가가 상당히 낮은 예

3) 개방도=(실질수출액+실질수입액)/실질GDP. 무역의존도라는 개념으로도 많이 쓰인다.

외적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의 비례관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의 추세선상(또는 조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⁴⁾

| 그림 1.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2006년 기준)



주: 1. 물가 수준은 2006년 현재 OECD 평균을 100으로 설정하였을 때 상대적 수준
 2. 1인당 GDP는 2000년 기준 OECD 평균(PPP 적용)을 100으로 하였을 때 2006년 현재 각국의 상대적 수준

자료: OECD

4) 이인권·민승규(1997)의 연구에 따르면 1993년 기준으로 한국의 물가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판단된 1인당 GDP 수준에 대비해 볼 때, 추세선에서 크게 벗어나 높은 수준이었다.

2. 우리나라의 물가 추이

(1) 주요 물가지수의 추세

대표적 물가지수인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점차 그 증가율이 둔화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1998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단기적으로 급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하락세가 뚜렷해졌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수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1990년대에 비해 2000년 이후 지수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었다. 가격지수 증가율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교육, 교통, 외식·숙박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2000년대에는 교육이 여전히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뒤를 이어 주류·담배,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소비자물가지수보다는 생산자물가지수도 1990년대에 비해 2000년 이후 그 증가율이 하락하여 2001~2007년 기간 중 증가율은 1.7%에 그쳤다(1991~2000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3.5%). 생산자물가지수를 상품지수와 서비스지수로 나누어 보면 2001~2007년 기간 중 두 지수는 각각 0.6%, 2.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생산자물가지수를 세분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1990년대 연평균 증가율 상위 항목은 광고 7.0%, 전문서비스 8.1%, 운수 5.9% 등이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전문서비스 4.2%, 광산품 4.3%, 금융 3.4% 등이 증가율 상위 항목이다.

가공단계별 물가지수의 경우 1990년대와 비교해 보면 2000년 이후 중간재와 최종재의 증가율은 상당히 둔화되었지만 원자재의 증가율은 1990년대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한 것이 중요한 특징이

라 할 수 있다. 1991~2000년 기간 동안 원자재는 연평균 7.1% 증가하였으나 2001~2007년 기간 동안은 9.7% 증가하였다. 한편 가공단계별 물가지수의 항목을 수입 및 국내로 나누어 살펴보면 원자재의 경우 1991~2000년 기간 중 국내 원자재의 연평균 증가율은 4.9%였고 수입 원자재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7.6%였다. 하지만 2001~2007년 기간 중에는 국내 원자재의 연평균 증가율이 4.0%로 1990년대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수입 원자재의 경우 같은 기간 중 평균 증가율이 10.9%로 1990년대에 비해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다. 즉 국내산 원자재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었지만 수입 원자재의 경우 크게 증가한 것이다. 반면 중간재의 경우 국내산, 수입산 모두 1990년대에 비해 2000년 이후 가격 상승률이 하락하였으며 최종재의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목격된다.

표 2.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상승률

(단위: %)

구분	1991~2000 평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1~2007 평균	
가공단계별 총지수	4.05	0.20	-2.69	1.95	8.25	2.60	3.35	3.51	2.44	
원자재	전체	7.07	2.30	1.27	6.37	19.96	18.00	12.56	7.40	9.71
	국내	4.83	3.40	4.45	4.26	16.34	-1.45	-3.64	4.18	3.93
	수입	7.56	2.10	0.59	6.82	20.69	22.28	15.44	7.87	10.83
중간재	전체	4.07	-0.40	-3.92	2.19	9.82	0.93	2.95	4.12	2.24
	국내	3.73	-1.70	-1.53	2.89	10.74	3.26	3.60	3.56	2.98
	수입	5.22	2.90	-9.43	0.21	7.49	-5.38	0.95	5.63	0.34
최종재	전체	3.55	0.50	-1.99	0.71	2.82	0.29	0.49	1.07	0.56
	국내	3.20	-0.60	-1.31	1.02	3.13	1.66	1.44	1.52	0.98
	수입	6.83	7.60	-5.86	-1.38	0.80	-9.04	-7.10	-1.65	-2.37

자료: 한국은행, ECOS

수입물가지수의 경우도 2000년 이후 1990년대에 비해 연평균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1991~2000년 기간 동안 수입물가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4.9%였으나 2001~2007년 기간 동안은 연평균 2.5%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2000년 이후 1990년대에 비해 농림수산품의 수입물가 증가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공산품은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광산품의 경우 2000년 이후 증가율이 1990년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같이 수입물가에서도 원자재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광산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광산품의 경우 2001~2007년 기간 중 연료광물의 연평균 증가율이 11.2%, 기타 광물이 15.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2001년 대비 2007년의 수입물가지수 증가분에 대해 연료광물의 기여율이 무려 158.1%를 기록하였다. 반면 공산품의 경우 -88.55%를 기록하여 연료광물의 높은 기여율의 효과를 줄여 주었다. 결국 2000년 이후 수입물가지수 상승의 대부분은 연료광물의 수입가격 상승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수입물가지수 상승률

(단위: %)

구분	1991~2000 평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1~2007 평균
총지수	4.86	7.7	3.5	-6.2	1.8	10.2	2.9	0.9	4.5	2.51
농림수산물	4.57	-1.6	11.1	2.0	3.4	9.3	-10.2	0.4	17.2	4.74
광산품	7.09	36.9	1.0	-0.3	6.3	21.3	30.1	17.5	5.6	11.64
공산품	4.37	2.3	3.8	-8.4	0.2	6.5	-6.4	-4.8	3.3	-0.83

자료: 한국은행, 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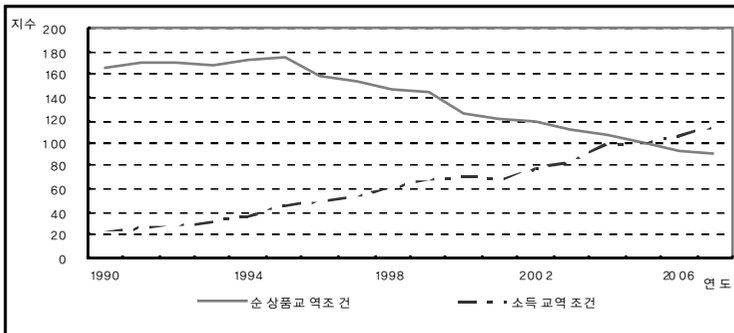
수출물가지수의 1990년대(1991~2000년) 연평균 증가율은 2.7%였으며 2000년대 들어 여러 물가지수 중 유일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2007년 기간 동안 수출물가지수는 연평균 -3.4% 감소율을 보였다. 수출물가지수 증감에 대해 세부항목의 기여율을 살펴보면, 2001년 대비 2007년 증가분에 대해 공산품의 기여율이 99.7%를 기록하였다. 수출물가지수의 전체 감소분에 대해 공산품의 가격 감소가 99.7%를 기여하였다는 의미이다.

수입물가지수의 증가와 수출물가지수의 감소는 결국 교역조건의 악화를 의미한다. 교역조건지수를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로 나눌 수 있는데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상품 1단위를 수출하면서 벌어들인 외화로 수입품을 얼마나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에 수출물량지수를 곱한 값으로서 한 나라의 수출총액으로 수입 가능한 총수입량을 나타낸다. 수출단가가 낮아져 순상품교역조건이 악화되어도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한다면(가격하락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전체 수출금액은 증가하게 되고 이 금액을 바탕으로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소득교역조건지수는 호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순상품교역조건은 199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수출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비해 수입단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이다. 하지만 가격하락으로 수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수의 증가율로 살펴보면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991~2000년 기간 중 연평균 2.5% 감소하였지만 2001~2007년 기간에는 연평균 4.6%나 감소하였다. 한편 소득교역조건지수를 보면 1990년대 기간 중 평균 12.1% 증가하였지만 2000년 이후 기간 중에는 7.2%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

되었다. 즉 2000년대 들어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순상품교역조건이 1990년대에 비해 크게 악화되었지만 가격하락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는 1990년대에 비해 크지 않아 소득교역지수의 증가폭이 둔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 감소에 따른 소득교역조건지수의 증가를 탄력성의 개념(소득교역조건지수 증가율/순상품교역조건지수 증가율)으로 보면 1991~2000년 기간 중에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 감소에 따른 소득교역조건지수의 증가의 탄력성이 4.8이었지만 2001~2007년 기간 중에는 탄력성이 3.1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교역조건지수의 추이



주: 2005년=100
 자료: 한국은행, ECOS

(2) 최근 물가 동향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기준)은 최근 3년간(2005~2007년) 연 2%대의 상당히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 왔다. 하지만 2007년 3분기 이후부터 물가 상승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물가의 상승폭이 소비자물가보다 훨씬 높았다. 2007년 1~9월 기간 중 소비자물가의 월평균 증가율은 0.3%였고 같은 기간 중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4%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2007년 10월~2008년 6월 기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인데 비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1%를 기록하여 그 차이가 훨씬 커졌다.

표 4. 최근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월평균 상승률

(단위: %)

구분	2005년 월평균	2006년 월평균	2007년 월평균	2007. 1~9 평균	2007. 10~ 2008. 6 평균	2008년			
						3월	4월	5월	6월
소비자물가지수	0.2	0.2	0.3	0.3	0.5	0.9	0.6	0.8	0.6
생산자물가지수	0.1	0.0	0.3	0.3	1.1	1.3	2.1	1.9	1.6

주: 2005년=100

자료: 한국은행, ECOS

생산자 측면의 물가지수를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의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2007년 9월 이후 원자재 및 중간재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1~9월 기간 중 원자재의 물가 상승률은 1.7%였으나 2007년 10월~2008년 6월 기간 중에는 6.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간재의 경우 2007년 1~9월 기간 중에는 0.5%에 그쳤으나 2007년 10월~2008년 6월 기간에는 2.6%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최종재의 경우 2007년 1~9월 기간 중에 0.3%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 10월~2008년 6월 기간 중에는 0.7%의 소폭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결국 원자재와 중간재의 물가 상승률, 특히 원자재의 높은 물가 상승이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을 주도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원자재를 국내와 수입으로 나누어 보면 수입 원자재의 물가

상승률이 국내 원자재보다 월등히 높아 수입 원자재의 높은 가격 상승률이 전체 원자재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이것이 생산자물가의 높은 상승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3월, 4월, 5월, 6월 기간 동안 국내 원자재의 경우 각각 4.4%, 3.3%, 5.5%, 1.2%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수입 원자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각각 9.7%, 6.1%, 17.0%, 6.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표 5.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월평균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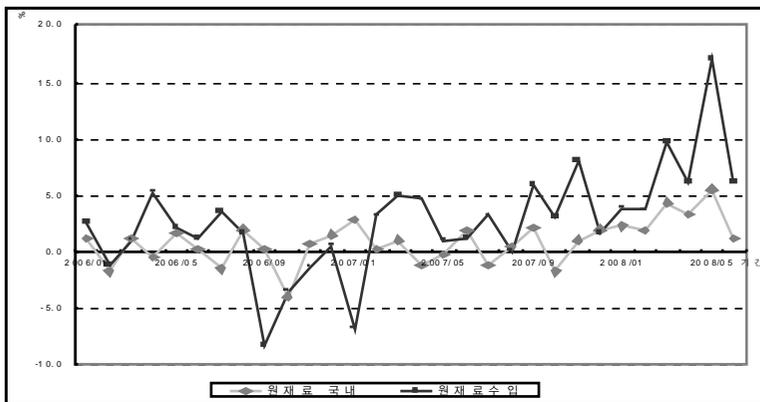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5년 월평균	2006년 월평균	2007년 월평균	2007. 1~9 평균	2007. 10~ 2008. 6 평균	2008년			
						3월	4월	5월	6월
원자재	2.3	0.2	2.2	1.7	6.0	9.1	5.8	15.7	5.6
중간재	-1.1	-0.3	1.3	0.5	2.6	3.9	3.5	4.5	2.5
최종재	0.3	0.3	0.6	0.3	0.7	1.0	0.9	1.5	0.3

주: 2005년=100

자료: 한국은행, ECOS

그림 3. 원자재 국내 및 수입물가 상승률 비교



자료: 한국은행, ECOS

수입물가지수의 경우 2007년 1~9월 기간 중 월평균 상승률은 0.9%였으나 2007년 10월~2008년 6월 기간 중에는 4.2%로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림수산품의 경우 2007년 1~9월 기간 중에는 증가율이 1.8%였으나 2007년 10월~2008년 6월 기간 중에는 3.1%를 기록하였다. 광산품은 2007년 1~9월 기간 중에 1.9%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 10월~2008년 6월 기간 중에는 6.9%로 증가율이 급등하였다. 공산품은 2007년 1~9월 기간 중에는 0.4%, 2007년 10월~2008년 6월 기간 중에는 2.8%의 증가율을 보여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가공단계별 물가지수에서 수입 원자재가 전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수입품 중 광산품이 수입물가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수입품목을 에너지와 비에너지로 나누어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에너지 품목의 가격 상승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수입에너지 품목의 월평균 가격 상승률은 2007년 1~9월 기간 중 2.1%였으나 2007년 10월~2008년 6월 기간 중에는 7.1%로 증가하여 3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최근 4개월 동안은 거의 월평균 11%에 가까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비에너지 품목은 2007년 1~9월 기간 중 0.5%, 2007년 10월~2008년 6월 기간 중에는 2.9% 평균 증가율을 보이는 데 그쳤다.

에너지 부문 수입물가의 높은 상승률은 국제 유가 추이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국제 유가는 2007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들어 그 증가율은 더욱 높아졌다. 2006년도 월평균 유가 상승률은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모두 1%대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2007년도 들어 월평균 상승률은 모두 3%대 중반을 기록하였다. 또한 2008년 들어서는 그 상승추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어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 증가율이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각각 6.99%, 6.55%, 6.65%를 기록하여 2007년 평균 증가율의 배에 이르고 있다.

표 6. 수입물가지수 월평균 상승률

(단위: %)

구분	2005년 월평균	2006년 월평균	2007년 월평균	2007. 1~9 평균	2007. 10~ 2008. 6 평균	2008년				
						3월	4월	5월	6월	
수입물가지수	0.6	-0.0	12	0.9	4.2	8.2	3.8	10.7	2.7	
기본 분류	농림수산물	-0.2	0.5	2.2	1.8	3.1	3.9	-0.1	4.9	-0.5
	광산품	3.3	0.3	2.5	1.9	6.9	10.5	6.8	18.3	6.8
	공산품	-0.4	-0.2	0.6	0.4	2.8	7.3	2.5	6.9	0.4
특수 분류	에너지	3.3	-0.1	2.9	2.1	7.1	10.6	6.9	18.9	5.7
	비에너지	-0.4	0.0	0.6	0.5	2.9	7.1	2.4	6.8	1.1

주: 2005년=100

자료: 한국은행, ECOS

표 7. 최근 국제 유가 상승률

(단위: %)

구분	2006년 월평균	2007년 월평균	2008년						2008년 1~6월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두바이유	1.00	3.41	1.84	3.35	7.44	6.97	15.33	7.03	6.99
브렌트유	1.12	3.47	1.46	3.36	9.15	4.51	12.70	8.15	6.55
WTI	0.58	3.51	1.86	2.62	10.49	6.83	11.35	6.77	6.65

자료: 한국석유공사

최근 들어 수입물가의 상승을 더욱 빨라진 이유 중의 하나로 원/달러 환율의 높은 상승세도 빼놓을 수 없다. 2007년 11월 이후로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으며 그 상승속도도 최근 매우

빨라졌다. 앞에서 살펴본 수입물가지수는 원화 기준인데 이를 달러 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효과를 알 수 있다. 2007년 1~9월 기간 중 원화 기준 수입물가와 달러 기준 수입물가의 증가율은 각각 0.9% 및 0.8%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7년 10월~2008년 6월 기간 동안에는 각각 4.2%와 3.0%로 원화 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이 달러 기준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같은 기간 중 원/달러 환율이 1.2%나 상승한 데 따른 결과이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원화 기준 수입물가와 달러 기준 수입물가의 상승률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6월 중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전월에 비해 원/달러 환율이 감소하였지만 지난 5월 중에는 원/달러 환율이 5.2%나 상승한 결과 달러 기준 수입물가는 5.3% 상승하였지만 원화 기준은 10.7%나 상승하기도 하였다.

표 8. 원화 및 달러 기준 수입물가와 환율 상승률

(단위: %)

구분	2006년 월평균	2007년 월평균	2007. 1~9 평균	2007. 10~ 2008. 6 평균	2008년			
					3월	4월	5월	6월
원화 기준	-0.0	1.2	0.9	4.2	8.2	3.8	10.7	2.7
달러 기준	0.8	1.2	0.8	3.0	4.3	3.1	5.3	3.4
원/달러 환율	-0.8	0.1	0.1	1.2	4.0	0.5	5.2	-0.7

자료: 한국은행, ECOS

3. 정책적 시사점

1990년대와 2000년 이후 물가지수의 연평균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거의 모든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2000년대 들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상당수의 품목들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었다. 유일하게 1990년대에 비해 크게 상승한 품목은 수입 원자재 품목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수입물가지수 품목들 중에서도 광산품의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아졌으며 가공단계별로 보아도 수입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생산자물가를 구성하는 품목 중에서도 상품 중 유일하게 광산품의 물가 상승률이 2000년대 들어 1990년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00년대 들어 전체적으로는 1990년대보다 물가 상승률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 원자재만은 1990년대보다 높은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다. 결국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등의 순서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최종적으로 소비자물가까지 그 효과는 전달될 것이다.

최근 물가 급등도 이 같은 추세의 연장선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던 수입 원자재의 가격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달러 환율의 상승 등이 겹치면서 대외부문의 물가충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국내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총수요 측면에서의 압력도 있었지만(최근 몇 분기 동안 GDP 갭은 양(+))의 값을 시현) 그동안 공산품을 중심으로 가격안정이 상당히 이루어져 총수요 압력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

거보다 매우 약해졌다. 반면 원자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입 원자재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는 바로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 시점에서 총수요 압력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외부 요인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확장 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실제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실현되는 악순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외부여건이 안정이 될 때까지 생산성 증가 내에서 임금 인상,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촉진 등의 가격 안정화 중심의 정책운용이 바람직하다. 또한 원/달러 환율의 추세 변화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나친 변동성은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GDP 갭이 음(-)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총수요 압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원자재가격이 안정이 되는 시점에서는 금리인하 등의 확장정책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외부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경제체질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한국의 물가 상승 결정요인의 분석

최근 국제 원유가의 급등, 밀, 옥수수과 같은 농산물 가격의 상승, 각종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노동생산성 증가를 앞지르는 높은 임금 상승률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상승시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더 높은 비용부담은 일반 소비자들의 높은 가격부담으로 전가되며, 궁극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생활물가를 상승시키게 된다. 결국 생활물가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일반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생활물가 상승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생활물가, 서민생활물가의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생산자물가 상승요인

최종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가격은 중간재로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수입 원자재의 가격,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자본을 투자한 자본가의 영업이익 수준, 각종 간접세, 감가상각액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기업의 생산활동에서는 중간투입재의 가격 변화,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생산활동이 이들 중간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방법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 원자재가격 변화에 따른 생산성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임금 상승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기업은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생산방법을 변화시키게 되므로 노동의 생산성 역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생산성 증가요인들은 생산자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서 전술한 중간재투입가격, 수입 원자재 가격, 임금가격, 영업이익 등에 의해 초래되는 물가 상승요인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분석을 위한 기본모형은 후지가와교시(藤川清史)(2005)의 모형과 이에 바탕을 둔 Jin-Myon Lee, Takatoshi Watanabe and Kiyoshi Fujikawa(2006)의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두 시점 간의 가격 변화의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begin{aligned}
 p_2^d - p_1^d &= [(p_2^m A_2^m + w_2 L_2 + O_2) B_2] - [(p_1^m A_1^m + w_1 L_1 + Q) B_1] \\
 &= (p_2^m - p_1^m)(A_1^m B_1 + A_1^m B_1)/2 &<수입 중간재투입에 의한 가격 변화> \\
 &\quad + (p_2^m + p_1^m)(A_2^m - A_1^m)(B_1 + B_2)/4 &<수입 중간재투입에 의한 생산성 변화> \\
 &\quad + (w_2 - w_1)(L_2 B_2 + L_1 B_1)/2 &<임금 변화> \\
 &\quad + (w_2 + w_1)(L_2 - L_1)(B_2 + B_1)/4 &<노동생산성 변화> \\
 &\quad + [(p_2^m + p_1^m)(A_2^m + A_1^m) + (w_2 + w_1)(L_2 + L_1) \\
 &\quad + 2(L_2 + L_1)](B_2 - B_1)/4 &<국내 중간재투입의 생산성 변화> \\
 &\quad + (O_2 - O_1)(B_2 + B_1)/2 &<비용자보수 외 다른 부가가치 요인의 변화>
 \end{aligned}$$

생산자물가 상승을 가져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이상의 방법론은 국내 중간재투입계수 행렬(A^d), 수입 중간재투입계수 행렬(A^m), 노동투입계수(L)과 같이 산업연관표에서 작성될 수 있는 계수행렬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산업연관표와 동일한 산업분류기준의 산업별 국내 가격 벡터(p^d), 산업별 수입가격 벡터(p^m), 임금벡터(w) 등을 필요로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하고 있는 『연속불변산업연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연속불변산업연관표』는 1990년, 1995년, 2000년을 연결한 『1990~1995~2000년 접속불변산업연관표』가 작성되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1990~1995~2000년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이용하되 이미 발표된 2003년의 경상가격 산업연관표와 국민계정(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과 요소소득)의 산업부문별 총산출, 중간투입, 부가가치 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 불변산업연관표를 추계하였다.

국민계정상의 산업분류표는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과 1) 음식료품 담배 2) 섬유 및 가죽 3) 목재, 종이, 출판 및 인쇄 4) 석유, 석탄 및 화학제품 5) 비금속광물제품 6) 금속제품 7) 기계 및 전기전자기기 8) 운수장비 9) 가구 및 기타 제조업의 9개 제조업,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의 9개 서비스업, 총 20개 산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자물가의 변화요인에서의 현저한 특징을 1990~2000년과 2000~2005년의 두 기간에 걸쳐 살펴보았다.

우선 가장 현저한 특징은 생산자물가의 상승에 중간재의 가격 변화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수입 중간재가격 변화

에 따른 투입계수의 변화, 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투입계수의 변화의 총체적인 효과로서 생산자 가격의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둘째는 생산자가격의 변화에 임금 인상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 인상이 생산자 가격의 변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 증가 역시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이 노동생산성 증가를 크게 능가하고 있다.

셋째는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의 역할 역시 생산자물가의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수입 원자재를 절약하려는 생산성 증가 노력 역시 크게 진전되고 있다.

넷째, 기타 부가가치 구성요인에 의한 금융비용은 점차 감소하면서 대부분 산업부문에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4. 주요 산업 생산자물가 상승의 결정요인 분해결과(1990~200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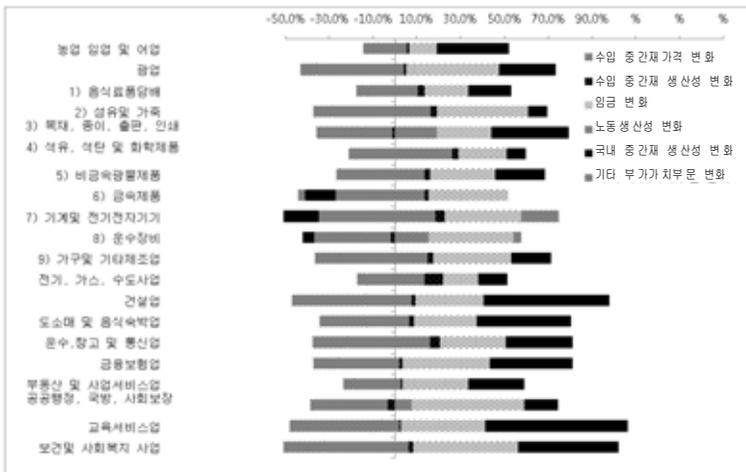


그림 5. 주요 산업 노동생산성 초과 임금 상승률(1990~200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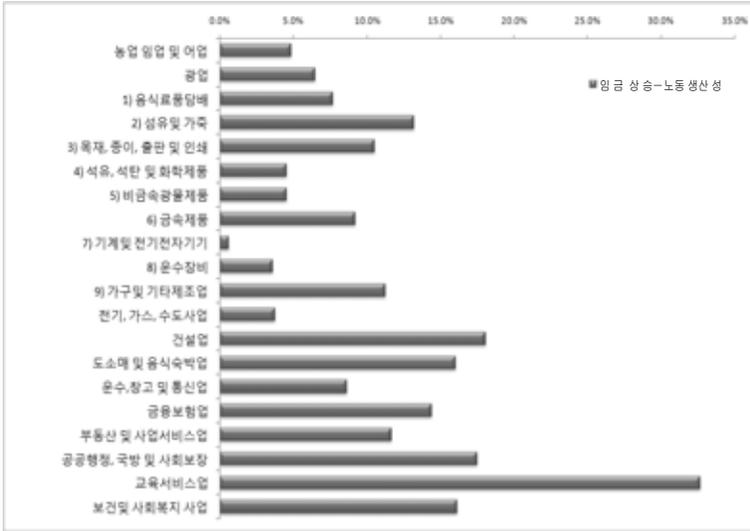


그림 6. 주요 산업 생산자물가 상승의 결정요인 분해 결과(2000~200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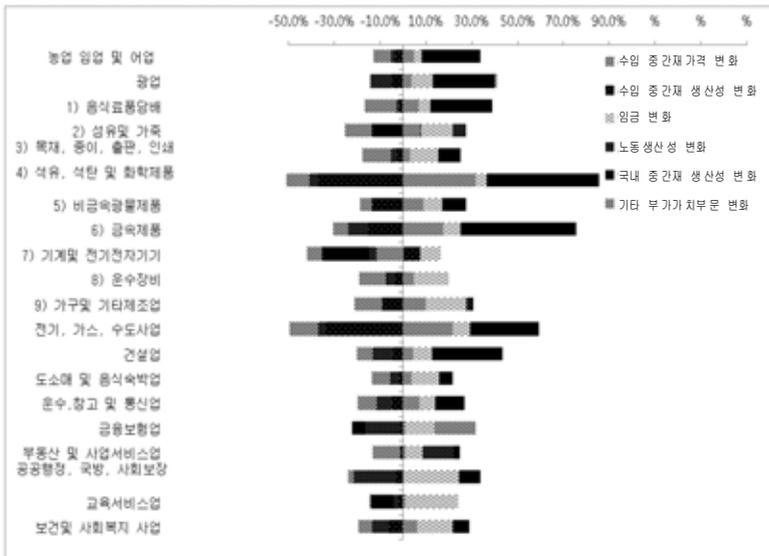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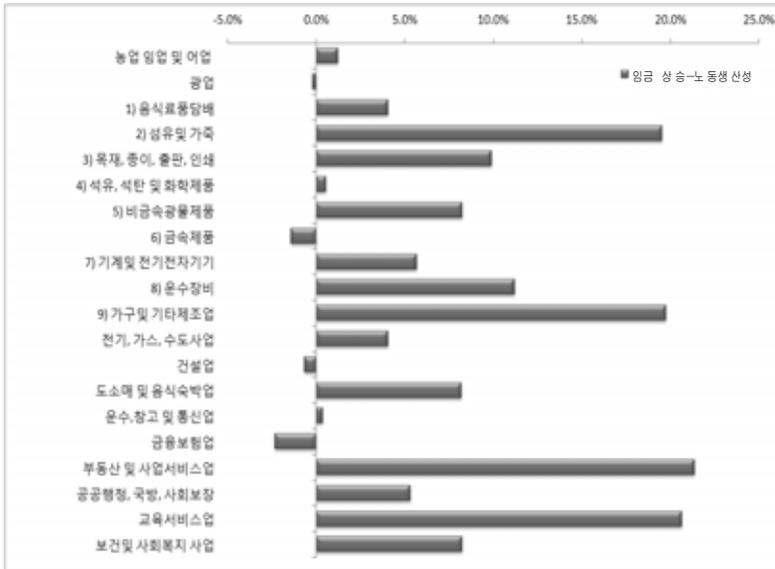


그림 7. 주요 산업 노동생산성 초과 임금 상승률(2000~2005년 기준)



2. 생활물가 상승의 결정요인

생활물가 상승요인의 분석에서는 각 구성품목의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와 기여율을 계산함으로써 어떤 품목이 생활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단기적인 생활물가의 상승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의 물가 상승에 대해 주로 살펴보았다. 생활물가지수의 조사품목은 쌀, 배추, 쇠고기 등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가 높은 152개 생필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활물가(주거비 포함)는 2008년 7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6.4% 상승하였다. 이는 주로 국제 유가 상승에 의해 유발된 휘발유, 경유, 등유, 도시가스 가격 상승에 의해 40% 이상 상승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립대 및 전문대 등록금·고등학교 및 유치원 납입금과 같은 교육비가 생활물가의 12%를 상승시키고 있다.

그 외 곡물가격 상승과 관련된 것으로써 빵, 자장면, 달걀, 과자, 라면 등이 생활물가를 상승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결국 약 30개 품목이 생활물가 상승의 80% 이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주거비·교통비·교육비·사교육비·식료품비와 관련된 품목들이다.

아울러 여기에서는 생활물가와 유사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을 국민계정상 가계소비지출의 형태와 소비지출 형태별 가격 디플레이터의 변화에서부터 살펴보기로 하였다.

표 9. 생활물가 상승의 구성품목별 기여도 및 기여율

생활물가지수	가중치	증가율	기여도	기여율	순위	누적기여율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	1.000	6.4%	6.4%	100.0%		
생활물가지수	0.852	7.1%	6.1%	95.2%		
휘발유	0.047	24.8%	1.2%	18.8%	1	18.8%
경유	0.017	51.2%	0.9%	14.7%	2	33.5%
등유	0.008	65.8%	0.5%	8.4%	3	42.0%
돼지고기	0.011	25.4%	0.3%	4.4%	4	46.3%
LPG(자동차용)	0.007	33.0%	0.3%	4.0%	5	50.4%
도시가스	0.024	7.6%	0.2%	3.3%	6	53.6%
납입금(사립대학교)	0.023	7.2%	0.2%	2.9%	7	56.5%
납입금(유치원)	0.013	8.4%	0.1%	1.9%	8	58.4%
보육시설이용료	0.015	6.6%	0.1%	1.7%	9	60.1%
공동주택관리비	0.019	5.5%	0.1%	1.6%	10	61.8%
우유	0.009	11.4%	0.1%	1.5%	11	63.2%
쌀	0.021	4.9%	0.1%	1.5%	12	64.7%
대입학원비(종합)	0.012	7.2%	0.1%	1.5%	13	66.2%
삼겹살(외식)	0.009	9.6%	0.1%	1.4%	14	67.6%
김밥	0.004	21.4%	0.1%	1.4%	15	68.9%
LPG(취사용)	0.002	37.4%	0.1%	1.3%	16	70.2%
빵	0.005	17.7%	0.1%	1.3%	17	71.5%
고입학원비(종합)	0.012	6.3%	0.1%	1.3%	18	72.8%
미용료	0.013	6.5%	0.1%	1.3%	19	74.0%
대입학원비(단과)	0.012	6.1%	0.1%	1.2%	20	75.2%
납입금(전문대학)	0.008	7.5%	0.1%	1.0%	21	76.2%
차장면	0.005	13.7%	0.1%	1.0%	22	77.2%
달걀	0.003	24.6%	0.1%	1.0%	23	78.2%
보습학원비	0.009	6.7%	0.1%	1.0%	24	79.2%
고입학원비(단과)	0.012	4.8%	0.1%	0.9%	25	80.1%
과일주스	0.004	13.7%	0.1%	0.9%	26	81.0%
라면	0.004	15.0%	0.1%	0.9%	27	81.9%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을 식료 및 음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임료 및 수도·광열, 가계시설운영, 의료 및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및 숙박, 기타, 국외 소비지출, 국내 소비지출로 나누어 실질가격으로 그 지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식료 및 음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임료 및 수도·광열, 가계시설운영, 교통, 교육, 음식 및 숙박 부문의 소비지출 비중은 줄어든 반면 의료 및 보건, 통신, 오락 문화 부문의 소비지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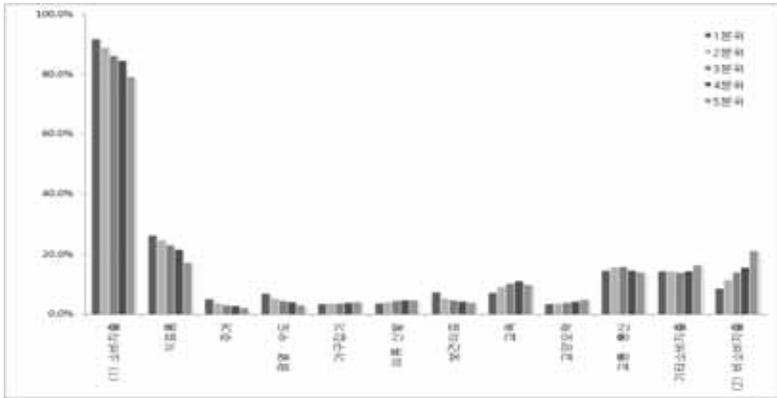
이런 가운데 현저한 특징은 식료 및 음료품 부문의 소비지출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통신비의 지출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식료 및 음료품 부문의 소비지출 비중은 1990년 22.9% 였으나 2007년 13.1%로 무려 9.8%나 감소한 반면 통신비 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0.7%에서 7.4%로 무려 6.7%나 증가하고 있다. 통신비 지출 비중은 경상가격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실질가격으로는 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통신비 관련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지출의 형태가 소득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소득계층별로 볼 때는 가계소비지출 비중 가운데 음식료품 분야의 지출 비중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당히 높고 소득계층별로 지출 비중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음식료품의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에 대해 더욱 큰 충격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특징은 수도 및 광열, 주거비, 의료 및 보건 분야에서 현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의 물가 상승 원인이 주로 국제 유가와 곡물가격 상승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음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상대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 될 것이다.

표 10. 가계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

구분	식료 음료품	주류 담배	의류 신발	임료 수도· 광열	가계 시설 운영	의료 보건	교 통	통 신	오락 문화	교 육	음식 숙박	기 타	국외 소비 지출	국내 소비 지출	최종 소비 지출
1990	22.9	3.9	4.9	16.4	4.7	4.0	12.4	0.7	5.6	6.7	8.3	9.3	1.7	1.5	100.0
1991	22.4	3.7	5.0	16.1	4.8	4.3	12.7	0.8	6.0	6.4	8.2	8.9	1.8	1.2	100.0
1992	21.8	3.6	5.1	16.3	4.8	4.4	12.9	0.9	6.3	6.3	7.9	9.2	1.6	1.1	100.0
1993	21.1	3.4	5.2	16.4	5.0	4.5	13.0	1.1	6.5	6.0	7.5	9.6	1.5	1.0	100.0
1994	19.9	3.0	5.4	16.3	5.2	4.7	13.1	1.5	6.9	5.7	7.3	10.3	1.7	1.0	100.0
1995	18.5	2.8	5.8	15.9	5.4	4.5	13.3	2.0	7.3	5.4	6.9	11.3	2.1	1.2	100.0
1996	17.7	2.6	5.7	16.0	5.3	4.3	13.2	2.4	7.2	5.2	6.9	12.1	2.4	1.1	100.0
1997	17.4	2.6	5.3	16.5	5.1	4.5	13.2	3.0	7.2	5.2	6.9	12.2	2.1	1.2	100.0
1998	18.1	2.8	4.5	18.9	4.3	4.5	11.9	4.2	6.8	5.9	6.8	13.0	1.1	2.9	100.0
1999	17.4	2.5	4.4	18.0	4.5	4.3	12.2	4.9	7.1	5.5	7.5	12.5	1.4	2.2	100.0
2000	16.5	2.4	4.5	17.3	4.6	3.8	11.9	5.7	7.8	5.2	7.4	12.8	2.1	2.0	100.0
2001	15.7	2.3	4.4	16.8	4.5	3.5	11.9	6.2	8.0	5.4	7.6	13.4	2.2	2.0	100.0
2002	14.7	2.1	4.6	15.9	4.5	3.9	11.5	6.5	8.4	5.1	7.5	13.9	2.9	1.6	100.0
2003	14.4	2.2	4.3	16.5	4.3	4.2	11.0	6.7	8.2	5.4	7.7	13.8	2.8	1.3	100.0
2004	14.3	2.2	4.3	16.9	4.3	4.4	10.6	7.1	7.9	5.4	7.6	13.3	3.3	1.5	100.0
2005	13.8	2.0	4.3	16.9	4.3	4.6	10.4	7.2	8.0	5.3	7.3	13.2	3.9	1.2	100.0
2006	13.5	1.8	4.5	16.6	4.2	4.7	10.2	7.3	8.0	5.2	7.2	13.4	4.4	1.0	100.0
2007	13.1	1.8	4.4	16.2	4.2	4.7	10.1	7.4	8.1	5.1	7.0	14.2	4.6	1.0	100.0

그림 8. 가계소비지출의 항목별 소득계층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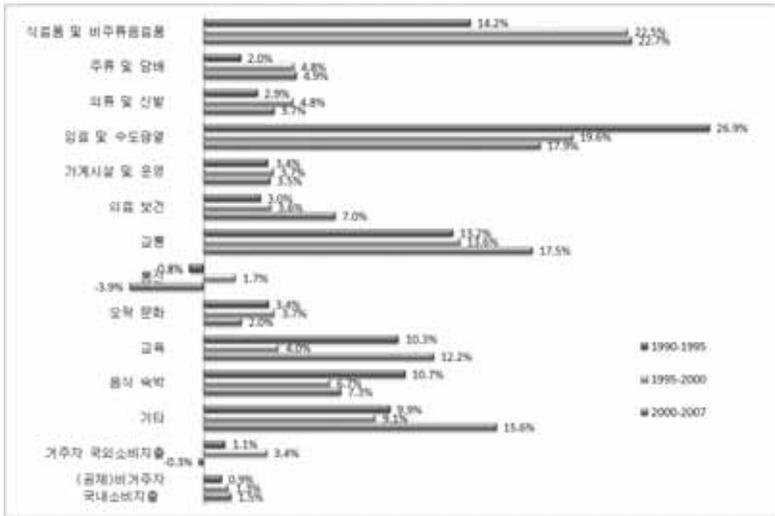
가계소비지출 부문별 지출 현황을 경상가격과 불변가격으로 서로 비교하면 가계지출 부문별 가격 디플레이터를 구할 있다. 또한 가계 지출 부문별 가격 디플레이터의 기간별 증가율로부터 전체 가계지출 가격 디플레이터의 증가에 대한 기여율을 구할 수 있다. 이를 보면 가계지출에 있어서 어떤 부문의 가격 변화가 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림 9>는 가계소비지출 부문별 물가 상승이 전체 가계부문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를 기간별로 표시한 것이다. 과거에 비해 최근 2001~2007년간 물가 상승이 현저한 가계지출 부문은 식재료, 교통, 교육부문임을 알 수 있다. 식재료의 가격 상승 기여율은 1995~2000년간 22.5%에서 2000~2007년간 22.7%로 증가하였으며, 교통부문의 가격 상승률은 1995~2000년간 13.6%에서 2000~2007년간 17.5%, 교육부문은 1995~2000년간 4.0%에서 2000~2007년간 12.2%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다시 말하면 1995~2000년間に 비해 2000~2007년간 가계소비지출 부문

의 물가 상승은 주로 음식료품, 교통, 교육비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처럼 가계소비 부문에서의 물가 상승은 음식료품, 교통, 교육비에서 초래되고 있는데 가계소비지출에서의 이들 부문의 지출 비중상 가계의 소비지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소득계층별로 볼 때 저소득층에 부담을 더 크게 지우는 형태의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9. 가계소비지출의 항목별 가격 상승의 기여율



3. 수입물가 상승의 결정요인

최근 소비자물가, 서민생활물가뿐만 아니라 생산자물가지수도 국제 유가나 곡물 등과 같은 수입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기인한 바 크다. 지난 1년간 수입물가 상승을 가져온 품목들의 기여도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품목의 가격 상승이 수입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또 이로 인해 생산자물가 또는 소비자물가를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지난 1년간, 즉 2008년 7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수입물가는 34.4% 증가하였다. 이처럼 높은 수입물가 상승을 가져온 품목들의 살펴보면 우선 원유가격 상승이 지난 1년간 94% 상승하였지만 가중치를 감안한 기여도는 18.3%이다. 즉 수입물가 상승률 가운데 약 53.2%가 원유가격의 상승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이 액화천연가스로서 수입물가 상승의 7.5%에 해당하는 2.6%를 기록하고 있다. 그 외 나프타, 고철, 천연인산칼슘, 합금철, 슬랩, 후판, 열연강대 등 원자재들의 수입가격 상승이 전반적 수입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밀, 옥수수의 가격 역시 급증하였다. 옥수수와 밀 수입가격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55.2%, 67.9%씩 증가하였는데 수입물가 작성에 있어서 가중치가 낮아서 수입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율이 각각 1.3%, 0.7%에 그치고 있다.

수입물가지수를 구성하는 각 품목의 수입물가 상승에 있어서 기여도와 기여율은 <표 1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최근 수입물가 상승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수입물가 상승의 53.2%가 원유가 상

승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 유가가 안정되지 않는 한 수입물가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표 11. 수입물가 상승의 구성품목별 기여도 및 기여율

수입물가지수	가중치	증가율	기여도	기여율	순위	누적기여율
총지수	1.000	34.4%	34.4%	100.0%		
원유	0.169	94.0%	18.3%	53.2%	1	53.2%
액화천연가스	0.036	65.5%	2.6%	7.5%	2	60.8%
나프타	0.026	68.7%	2.2%	6.5%	3	67.2%
고철	0.009	103.1%	1.2%	3.5%	4	70.7%
천연인산칼슘	0.002	291.9%	0.9%	2.5%	5	73.2%
철광석	0.008	82.6%	0.8%	2.4%	6	75.6%
슬랩	0.007	75.8%	0.6%	1.9%	7	77.5%
합금철	0.006	71.8%	0.6%	1.9%	8	79.3%
후판	0.008	66.5%	0.6%	1.8%	9	81.1%
열연강대	0.013	40.6%	0.5%	1.3%	10	82.5%
옥수수	0.005	55.2%	0.4%	1.3%	11	83.7%
선철	0.002	139.4%	0.3%	0.9%	12	84.7%
빌레트	0.003	95.1%	0.3%	0.9%	13	85.5%
프로판가스	0.005	51.2%	0.3%	0.8%	14	86.3%
밀	0.003	67.9%	0.3%	0.7%	15	87.1%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원화표시 수입물가 상승은 달러화표시 수입물가에 환율 변화까지 감안하여 검토하였다.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환율(평균 환율)은 10.9%, 국제 원유가(달러 기준)는 94.0%, 밀가격(달러 기준)은 67.9%, 옥수수가격(달러 기준)은 55.2% 상승하였다. 이들 수입가격 상승 또는 환율 변화로 인해서 원가 상승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위 10개

품목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국제 원유·밀·옥수수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압박 상위 품목군

구분	순위	품목	물가 상승요인
환율	1	중유	98%
	2	제트유	95%
	3	나프타	94%
	4	석유화학기초제품	88%
	5	기타 비철금속괴	83%
	6	동괴	82%
	7	외항운송	80%
	8	기타석탄제품	80%
	9	모사	79%
	10	도시가스	7.7%
원유	1	중유	82.3%
	2	나프타	80.2%
	3	제트유	79.5%
	4	등유	53.2%
	5	액화석유가스	49.2%
	6	기타석유정제품	45.9%
	7	경유	45.0%
	8	질소화합물	35.3%
	9	석유화학기초제품	30.4%
	10	휘발유	25.4%
밀	1	제분	40.3%
	2	국수류	5.8%
	3	배합사료	3.0%
	4	빵 및 곡분과자	3.0%

<표 12. 계속>

구분	순위	품목	물가 상승 요인
밀	5	밀	2.7%
	6	양돈	1.8%
	7	가금	1.7%
	8	기타 식료품	1.5%
	9	가금육	1.3%
	10	도축육	1.2%
옥수수	1	전분	31.3%
	2	당류	12.6%
	3	배합사료	11.0%
	4	양돈	6.5%
	5	가금	6.3%
	6	가금육	4.9%
	7	도축육	4.7%
	8	한육우	4.4%
	9	낙농	4.3%
	10	우유	2.6%

4. 서민생활물가 상승의 결정요인

국제 유가와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필수품 52개’를 선정하여 물가 상승을 집중 관리키로 하였으며, 또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교통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이렇게 하여 관리대상이 된 생활필수품 52개는 소비자물가 작성기준으로 볼 때 7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들 품목으로부터 서민생활물가를 작성하고 아울러 이렇게 작성된 서민생활물가의 상승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품목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물가지수 상승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 또는 기여율을 통해 어떤 상품이 서민생활물가를 상승시켜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정부가 지정한 생활필수품 52개로부터 작성된 서민생활물가지수의 추이를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와 더불어 살펴보면 최근 모든 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7월말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는 5.9%, 생활물가는 7.1% 상승하여 크게 수년 내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서민생활물가지수(주거비 포함)는 7.8% 상승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1.9%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원유, 밀, 옥수수가격 및 환율 상승의 효과가 시차를 가지고 생산원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아직 이들 가격의 상승이

제대로 생산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서민생활물가지수의 상승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서민생활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원인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은 서민생활물가지수 작성에 사용된 52개 품목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이 서민생활물가지수 증가율에 기여한 정도(기여도)와 서민생활물가지수 증가율을 100%로 했을 때의 기여율 및 서민생활물가지수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순서에 따른 누적 기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7월말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서민생활물가(주거비 포함)는 7.8% 상승하고 있다. 높은 서민생활물가지수는 서민생활물가를 구성하는 52개 품목 가운데 휘발유, 경유, 납입금, 학원비, 중유, 주거비 등의 순서로 많은 상승압박을 받고 있다. 이 중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은 모두 국제 유가 상승과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품목으로써 국제 유가 상승이 서민생활물가지수의 상승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품목이 서민생활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민생활물가지수의 상승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24.8% 상승하고 있는데 물가지수 작성에 있어서 그 가중치를 고려하면 전년동월 대비 서민생활물가지수 상승률 7.8%의 21.3%(기여율 기준)에 해당하는 1.7%를 상승시키고 있다. 경유는 서민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의 16.6%에 해당하는 1.3%를 상승시키고 있다. 또 등유가 서민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의 9.5%에 해당하는 0.7%를 상승시키고 있다. 따라서 휘발유, 경유, 등유의 가격 상승이 결국 서민생활물가 상승의 47.4%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민생활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그 다음 품목은 납입금과 학원비와 같은 교육비의 상승이다. 이들은 국제 유가 상승이나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품목이지만 서민생활물가지수의 상승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납입금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6.6%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생활물가 상승에 7.8%나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원비는 전년동월 대비 6.0%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생활물가 상승의 7.1%를 차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유가나 곡물가격 상승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교육비, 학원비가 서민생활물가지수 상승의 14.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주거비, LPG, 돼지고기의 가격 상승은 서민생활물가 상승에 각각 6.2%, 6.0%, 4.9% 기여하고 있다.

표 13. 서민생활관련 52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 및 기여도

서민생활물가 품목명	증가율 (동월대비)	기여도	기여율	순위	누적기여율
소비자물가지수	5.9%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	6.4%				
생활물가지수	7.1%				
주거비포함서민생활물가지수	7.8%	7.8%	100.0%		
서민생활물가지수	9.1%				
휘발유	24.8%	1.7%	21.3%	1	21.3%
경유	51.2%	1.3%	16.6%	2	37.9%
등유	65.8%	0.7%	9.5%	3	47.4%
납입금	6.6%	0.6%	7.8%	4	55.2%
납입금(유치원)	8.4%	0.2%	2.2%		
납입금(고등학교)	1.9%	0.0%	0.4%		

<표 13. 계속>

서민 생활물가 품목명	증가율 (동월대비)	기여도	기여율	순위	누적기여율
납입금(사립대학교)	7.2%	0.3%	3.2%		
납입금(국공립대학교)	7.9%	0.1%	0.8%		
납입금(전문대학)	7.5%	0.1%	1.2%		
학원비	6.0%	0.6%	7.1%	5	62.3%
피아노 학원비	4.3%	0.0%	0.6%		
보습학원비	6.7%	0.1%	1.1%		
대입학원비(단과)	6.1%	0.1%	1.3%		
고입학원비(단과)	4.8%	0.1%	1.0%		
대입학원비(종합)	7.2%	0.1%	1.7%		
고입학원비(종합)	6.3%	0.1%	1.4%		
주거비	2.4%	0.5%	6.2%	6	68.5%
LPG	34.0%	0.5%	6.0%	7	74.5%
LPG(취사용)	37.4%	0.1%	1.5%		
LPG(자동차용)	33.0%	0.4%	4.5%		
돼지고기	25.4%	0.4%	4.9%	8	79.5%
도시가스	7.6%	0.3%	3.7%	9	83.2%
보육시설이용료	6.6%	0.2%	1.9%	10	85.1%
공동주택관리비	5.5%	0.1%	1.8%	11	86.9%
우유	11.4%	0.1%	1.7%	12	88.6%
쌀	4.9%	0.1%	1.7%	13	90.3%
빵	12.9%	0.1%	1.5%	14	91.8%
빵	17.7%	0.1%	1.4%		
식빵	2.3%	0.0%	0.0%		
케이크	2.0%	0.0%	0.1%		
이·미용료	5.8%	0.1%	1.5%	15	93.3%
이용료	1.5%	0.0%	0.1%		
미용료	6.5%	0.1%	1.4%		
자장면	13.7%	0.1%	1.1%	16	94.4%

<표 13. 계속>

서민 생활물가 품목명	증가율 (동월대비)	기여도	기여율	순위	누적기여율
달걀	24.6%	0.1%	1.1%	17	95.5%
라면	15.0%	0.1%	1.0%	18	96.5%
목욕료	10.5%	0.1%	1.0%	19	97.6%
스낵과자	15.8%	0.1%	1.0%	20	98.6%
바지	4.4%	0.1%	0.8%	21	99.4%
남자바지	4.6%	0.0%	0.3%		
여자바지	4.3%	0.0%	0.5%		
외래진료비	2.1%	0.1%	0.7%	22	100.1%
양과	43.6%	0.1%	0.7%	23	100.8%
두부	17.0%	0.0%	0.6%	24	101.3%
세제	10.9%	0.0%	0.5%	25	101.9%
세탁비누	51.6%	0.0%	0.1%		
가루비누	8.9%	0.0%	0.3%		
부엌용 세제	5.0%	0.0%	0.0%		
청소용 세제	10.1%	0.0%	0.0%		
고등어	18.3%	0.0%	0.5%	26	102.4%
상수도료	2.7%	0.0%	0.4%	27	102.8%
쇠고기	1.9%	0.0%	0.4%	28	103.3%
쇠고기(국산)	0.9%	0.0%	0.2%		
쇠고기(수입)	6.1%	0.0%	0.3%		
화장지	9.9%	0.0%	0.4%	29	103.7%
유아용품	1.9%	0.0%	0.3%	30	104.0%
분유	-1.1%	0.0%	0.0%		
아동복	4.8%	0.0%	0.4%		
종이기저귀	-1.6%	0.0%	-0.1%		
밀가루	89.6%	0.0%	0.2%	31	104.2%
콩나물	12.9%	0.0%	0.2%	32	104.4%
삼푸	4.0%	0.0%	0.1%	33	104.5%

<표 13. 계속>

서민생활물가 품목명	증가율 (동월 대비)	기여도	기여율	순위	누적기여율
쓰레기봉 투료	2.6%	0.0%	0.1%	34	104.7%
식용유	9.2%	0.0%	0.1%	35	104.8%
고추장	5.1%	0.0%	0.1%	36	104.9%
시내버스료	0.2%	0.0%	0.1%	37	104.9%
방송수신료	0.9%	0.0%	0.0%	38	105.0%
설탕	2.3%	0.0%	0.0%	39	105.0%
위생대	0.2%	0.0%	0.0%	40	105.0%
소주	0.0%	0.0%	0.0%	41	105.0%
전기료	0.0%	0.0%	0.0%	41	105.0%
전철료	0.0%	0.0%	0.0%	41	105.0%
가정학습지	0.0%	0.0%	0.0%	41	105.0%
시외버스료	0.0%	0.0%	0.0%	41	105.0%
이동전화 통화료	0.0%	0.0%	0.0%	41	105.0%
마른멸치	-0.1%	0.0%	0.0%	47	105.0%
과	-5.8%	0.0%	-0.1%	48	104.9%
마늘	-8.6%	0.0%	-0.3%	49	104.5%
사과	-13.3%	-0.1%	-1.0%	50	103.5%
무	-43.8%	-0.1%	-1.2%	51	102.3%
배추	-38.1%	-0.2%	-2.3%	52	100.0%

5. 한국 물가 상승과 생산성 수준의 국제 비교

해외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라 물가 상승압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얼마나 잘 흡수하여 물가 상승압력으로 연결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업 또는 해당 산업의 비용구조와 생산성 증대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이 있을 경우 중간투입재 가운데 에너지 투입 비중이 낮을 경우에는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노동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상승률이 낮을 경우에도 물가 상승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또한 높은 생산성 증대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물가 상승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하여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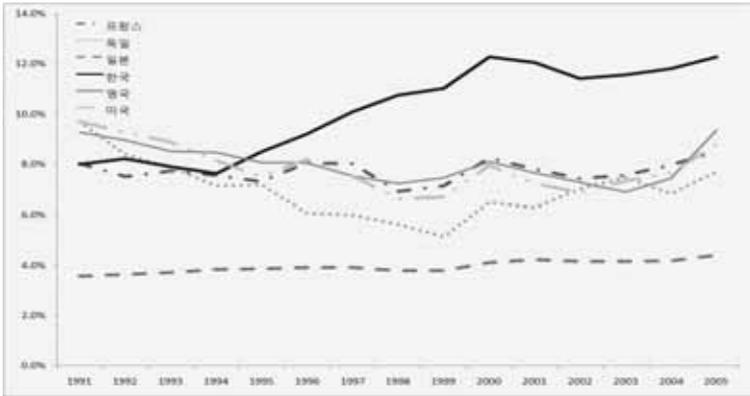
따라서 국가별로 에너지 투입비중이나 임금 상승 정도 또는 생산성 증가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면 국제 원유가 상승에 공통적으로 직면한 세계 여러 나라의 충격흡수 능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중간투입재 가운데 에너지 투입비중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으며, 이런 에너지 투입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이 해외 원유 가격 상승이란 충격의 흡수력이 매우 저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는 주요 선진국보다 시간당 임금지수 상승률이 높아서 해외 충격에 대한 흡수력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노동분배율 역시 최근 다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

준이어서 높은 임금지수 상승률에 따라 외부적 충격에 대한 흡수력을 더욱 낮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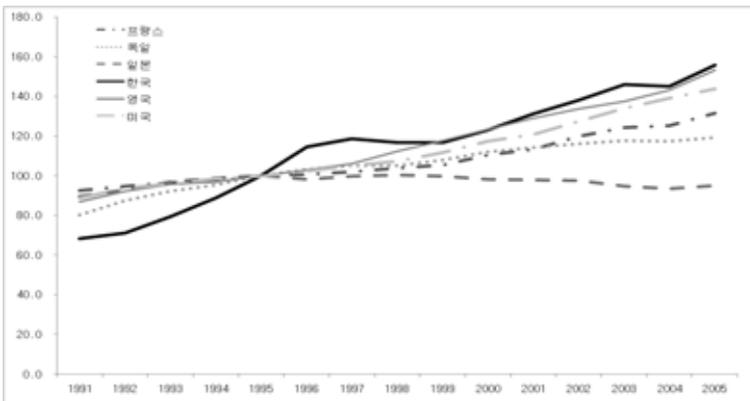
그림 10. 주요국의 에너지 투입비중 추이(1991~2005년 기준)



주: 에너지 투입비중은 총중간투입(중간재, 에너지 및 중간재서비스로 구성) 가운데 에너지 투입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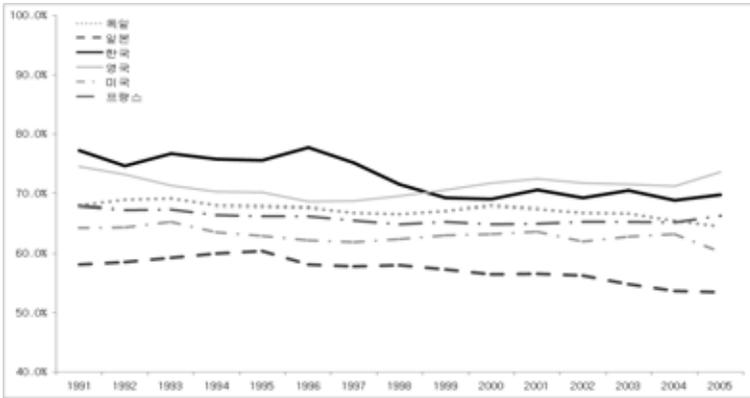
자료: EU KLEMS database, March 2008, www.euklems.net

그림 11. 주요국의 노동시간당 임금지수 추이(1991~2005년 기준)



자료: EU KLEMS database, March 2008, www.euklems.net

그림 12. 주요국의 노동분배율 추이(1991~2005년 기준)



자료: EU KLEMS database, March 2008, www.euklems.net

한국과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의 비교적 최근(2001~2005년간)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유가 등 해외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같은 비용 상승요인이 물가 상승을 지연시킬 수 있는 흡수력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은 많은 산업에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유가 등 해외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같은 비용 상승요인의 물가 상승압력을 낮추는 흡수력이 저조한 상태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일부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 걸쳐서 1991~2000년에 비해 2001~2005년간 더욱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선진국 대비 순위도 하락하고 있다.

표 14. 주요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구분	1991~2000						2001~2005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순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순위	영국	미국
전산업	0.7	0.7	-0.1	2.1	(1)	0.8	0.7	0.6	0.3	0.7	1.4	(2)	0.5	1.9
농·임·수산업	4.4	5.8	0.5	2.9	(3)	1.8	2.7	1.4	2.2	0.4	6.0	(1)	4.1	3.6
광업	-6.2	2.6	-2.0	4.0	(2)	5.7	2.4	-3.9	-2.9	0.3	-1.0	(2)	-7.5	-9.6
전·제조업	2.9	1.6	0.4	6.4	(1)	0.6	3.9	1.8	1.7	1.7	3.7	(2)	3.0	4.2
식료·음료·담배	-1.0	-0.3	-1.5	1.8	(1)	-1.3	1.4	2.4	-0.1	-2.8	-2.4	(5)	1.8	4.3
나무·나무제품	4.1	3.2	-0.6	2.3	(3)	-1.5	-2.2	3.8	4.2	-3.9	3.2	(3)	0.7	1.5
종이·인쇄·출판	0.2	1.0	-2.0	2.7	(1)	-0.2	0.3	0.8	0.5	0.2	-3.2	(6)	0.4	4.0
정유	42.4	-18.0	-4.7	8.3	(2)	-0.8	-8.0	-12.3	-18.1	-11.6	9.0	(1)	3.8	-15.6
화학	-0.9	4.7	0.4	6.2	(1)	2.4	0.8	1.7	5.2	-1.7	3.6	(2)	2.9	1.6
고무·플라스틱	12.9	0.9	-0.4	3.5	(3)	0.7	3.6	4.3	3.7	5.2	2.0	(5)	1.4	3.9
기타 비철광물	2.0	2.3	0.2	5.0	(1)	1.1	2.0	0.2	2.9	1.3	2.8	(4)	5.8	3.8
제1차금속·제품	0.5	2.2	0.7	4.5	(1)	0.5	4.1	1.0	-0.8	-0.6	-0.3	(4)	4.3	0.8
기계	3.9	1.8	-0.8	8.5	(1)	0.1	2.6	3.1	0.2	6.6	4.2	(4)	5.5	7.6
전기·전자·광학	5.2	3.4	6.1	14.0	(2)	4.3	15.4	5.6	7.3	12.2	8.7	(3)	3.1	9.5
수송장비	5.6	-0.4	0.2	6.1	(1)	0.7	1.5	1.0	1.0	2.1	4.6	(3)	4.7	7.5
기타 제조업	2.8	0.5	-1.0	2.6	(2)	-2.6	2.0	-4.1	-3.3	1.3	2.8	(2)	2.1	7.2
전기·가스·용수	1.6	2.4	-1.4	2.8	(1)	1.7	2.2	5.0	5.0	3.4	2.3	(4)	-0.3	0.4
건설	-0.2	-1.0	-3.1	0.7	(2)	0.9	-2.3	-1.2	0.0	-0.4	0.2	(2)	1.1	-0.7
도매·소매	0.9	0.8	1.8	2.2	(1)	1.1	1.5	-0.5	0.5	1.5	0.9	(4)	1.8	2.9
호텔·레스토랑	-1.4	-1.1	-0.3	-3.4	(6)	-0.5	-0.4	-2.2	-1.1	0.5	-2.7	(6)	1.4	2.8
수송·보관	2.5	3.7	-1.0	1.9	(4)	2.7	-0.6	1.0	1.2	2.7	2.4	(3)	0.4	4.6
우편·통신	4.5	5.2	3.0	12.4	(1)	8.7	-1.0	7.2	3.8	0.3	4.5	(3)	1.8	9.0
금융·보험	0.0	0.2	-0.4	-0.4	(6)	0.7	1.5	1.2	-2.7	0.5	5.7	(1)	4.2	1.7
부동산	-0.2	-1.5	-0.7	-2.3	(6)	-0.2	-0.6	0.5	-0.7	-0.4	-2.0	(6)	-0.9	1.6
서비스	-0.5	1.0	0.0	-0.5	(3)	-0.5	-0.5	0.2	-0.2	0.0	-1.7	(6)	-1.2	0.6

<표 14. 계속>

구분	1991~2000							2001~2005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순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순위	영국	미국
공공행정·국방	0.4	1.4	3.8	-2.0	(6)	-1.2	-0.1	0.6	0.6	1.4	-1.2	(5)	-1.3	0.5
교육	-1.7	0.2	-1.9	0.6	(1)	-0.8	-0.7	-2.1	-2.2	0.2	-2.5	(5)	-2.7	0.2
보건	-0.8	2.4	-0.4	-2.3	(6)	0.7	-1.1	0.4	1.2	-1.9	-1.3	(5)	0.5	1.0
기타 서비스	-0.1	-0.5	-2.3	1.9	(1)	-1.0	-0.3	2.6	-1.3	0.1	-1.4	(6)	-1.2	0.4

자료: EU KLEMS database, March 2008, www.euklems.net

6. 정책적 의미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파악한 다양한 물가의 상승요인에서 몇 가지 정책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국제 유가 및 곡물가격의 상승에 의해 초래된 물가 상승은 서민생활을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또는 광열비 상승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식료품비 지출이 특히 문제시되고 있다. 국제 유가와 곡물가격 상승과 무관한 교육비, 학원비의 상승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둘째, 노동생산성 증가율 수준의 임금 인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국제 유가 등 수입 원자재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이다. 따라서 노동생산성 증가율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물가 상승압력에 대해 경제주체 간 ‘제 몫 챙기기’ 쟁의는 궁극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원만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원유 및 곡물의 자주개발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국제 유가 및 곡물가격의 상승이므로 해외 원유 및 곡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주개발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 구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한국의 높은 에너지 투입비중, 낮아지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국제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과 같은 외부 충격요인의 흡수력을 낮추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 구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총론)

제3장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과 평가





1. 국내외 가격차이의 개념과 측정

국내외 가격차이는 동일 또는 동질상품의 국내 가격과 외국 가격 간의 차이를 말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두 가격 간의 상대적인 비율로 이를 측정한다. 즉 국내 소비자가격을 100으로 하고, 외국의 가격은 이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로 표시한다. 국가 간 화폐단위의 통일을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환율과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를 기준으로 국내외 가격차이를 측정한다.

국내외 물가 수준의 차이는 일정 품목군에 대한 가격의 가중평균 값의 비율로 측정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집계대상 품목군을 소비자 물가품목, 생활물가품목 및 생필품물가품목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물가지수는 가격지수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값을 100으로 하고, 외국의 물가지수를 이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로 측정한다. 이때 가중치는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시 적용하는 가중치를 사용한다. 따라서 국내외 물가 수준의 차이는 양국 국민의 생활비 차이를 나타내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이 국내 및 외국에서 생활할 때의 생활비 차이를 나타낸다.

2. 조사대상 도시 및 품목

본 보고서의 국내외 물가조사 대상도시는 총 69개국의 82개 도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을 82개 전체 도시뿐만 아니라 32개 OECD 가입국 도시 및 21개 주요경쟁국 도시들과도 비교한다.

본 보고서의 물가조사 대상품목은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품목 217개와 브랜드를 지정한 동일브랜드 품목 102개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는 KOTRA에 의뢰하여 2008년 3월에 실시하였다.

3.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 및 평가

(1) 서울의 물가지수 개관

본 보고서에서 산정·비교한 물가지수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생활필수품물가지수, 동일브랜드물가지수, 그리고 부문별 물가지수 등이다. 이 다섯 가지 물가지수는 조사대상 도시별로 환율(2008년 3월평균 환율) 기준 및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각각 산정되었으며, 이는 서울의 물가 수준을 100으로 한 상대지수이다.

주요 비교대상 도시군을 (i)82개 전체 도시 (ii)32개 OECD 가입국 도시 (iii)21개 주요 경쟁국 도시로 구분하여 각 물가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서울의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율 기준 물가지수의 경우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및 생필품물가지수는 3개 비교대상 도시군 평균보다 낮은 반면, 서울의 동일브랜드물가지수는 비교대상 도시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물가지수 순위에서 서울은 전체 도시 및 주요국 도시의 중간 수준이나, OECD 도시 중에서는 비교적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즉 서울의 물가 수준이 OECD 도시 중에서는 낮은 편이다). 다만, 동일브랜드물가지수에 있어서 서울은 OECD 도시 중 상위그룹에 속해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상품의 서울 가격이 OECD에 속한 선진국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구매력평가 기준 물가지수의 경우에도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및 생필품물가지수는 3개 비교대상 도시군 평균보다 낮으며, 순위에서 있어서는 3개 비교대상 도시군의 중간 수준이다. 구매

력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의 동일브랜드물가지수는 환율 기준의 경우와는 달리 전체 도시 및 주요국 도시 평균보다 낮으나 OECD 도시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 상품의 구매력평가 기준의 가격이 후진국 도시에서 높고 선진국 도시에서 낮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15. 환율 기준 물가지수 개관

(서울=100)

구분	전체 도시(82개)		OECD 도시(32개)	
	평균	서울 순위	평균	서울 순위
소비자물가지수	114.7	41	164.0	28
생활물가지수	109.6	35	166.9	24
생필품물가지수	120.6	40	175.2	27
동일브랜드물가지수	98.6	37	96.9	14

주: 순위는 물가지수가 높을수록 높음(물가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의 순위가 1위, 이하 동일).

표 16. 구매력평가 기준 물가지수 개관

(서울=100)

구분	전체 도시(70개)		OECD 도시(32개)	
	평균	서울 순위	평균	서울 순위
소비자물가지수	115.6	37	116.3	17
생활물가지수	105.2	27	118.3	16
생필품물가지수	117.8	38	124.0	19
동일브랜드물가지수	129.9	38	68.9	4

주: 구매력평가 기준의 경우 전체 도시 수는 구매력평가지수가 발표되는 70개 도시.

부문별 물가지수를 환율 기준으로 보면, 교통요금, 주거·수도·광열비, 주류·담배, 통신요금 등이 비교대상 3개 도시군에 비해 매우

저렴한 반면, 식료품, 신발, 의류, 이·미용, 차·음료 등은 매우 비싼 수준이다. 부문별 물가지수를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산출하는 경우에도 식료품, 신발, 의류, 이·미용, 차·음료 등은 비교대상 3개 도시군에 비해 매우 비싼 수준이며, 교통요금과 통신요금은 매우 저렴하다.

표 17. 환율 기준 부문별 물가지수 개관

부문	전체 도시(82개)		OECD 도시(32개)	
	평균	서울 순위	평균	서울 순위
가구·전자	1002	39	114.0	24
가사용품·가사서비스	87.7	32	138.7	25
교양·오락	1002	38	117.5	21
교육	1115	34	172.5	24
교통요금	178.1	67	210.3	28
보건·의료	1493	47	224.2	29
식료품	51.0	8	72.9	7
신발	61.6	14	71.6	6
외식·숙박	109.6	41	137.0	27
의류	65.8	13	67.5	5
이·미용	57.7	10	82.8	9
주거·수도·광열비	146.0	59	188.3	30
주류·담배	227.3	64	207.2	28
차량운영·연료비	91.2	27	126.8	18
차·음료	71.0	11	85.9	9
통신요금	345.4	76	441.2	31

표 18. 구매력평가 기준 부문별 물가지수 개관

부문	전체 도시(70개)		OECD 도시(32개)	
	평균	서울 순위	평균	서울 순위
가구·전자	125.9	37	81.5	7
가사용품·가사서비스	88.9	22	94.8	10
교양·오락	123.4	32	81.8	8
교육	107.8	28	122.2	17
교통요금	204.1	59	141.7	23
보건의료	161.2	53	158.4	25
식료품	54.9	4	50.4	2
신발	74.8	15	50.7	2
외식·숙박	122.9	42	95.8	13
의류	79.2	14	47.3	2
이·미용	62.4	8	58.0	2
주거·수도·광열비	160.7	51	131.0	22
주류·담배	260.8	47	153.0	13
차량운영·연료비	98.1	25	86.4	11
차·음료	85.3	17	61.3	2
통신요금	381.2	65	299.0	30

주: 구매력평가 기준의 경우 전체 도시 수는 구매력평가지수가 발표되는 70개 도시.

(2) 물가지수별 국제 비교

1)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및 생활필수품물가지수

세계 69개국 82개 도시의 1인당 GDP와 소비자물가지수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3>, <그림 14>와 같다. 이들 그림에서 횡축은 1인당 GDP, 종축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나타내며, <그림 13>은 두 변수를 환율 기준으로, <그림 14>는 두 변수를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서울은 환율 기준의

경우 1인당 GDP 1만9,975달러선과 소비자물가지수 100선의 교차지점에 테두리 있는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부산은 그로부터 수직으로 바로 아래의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속의 사선은 비교대상 도시들에 대한 1인당 GDP와 소비자물가지수 간의 회귀선(regression line)을 나타낸다.

그림 13. 세계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도(환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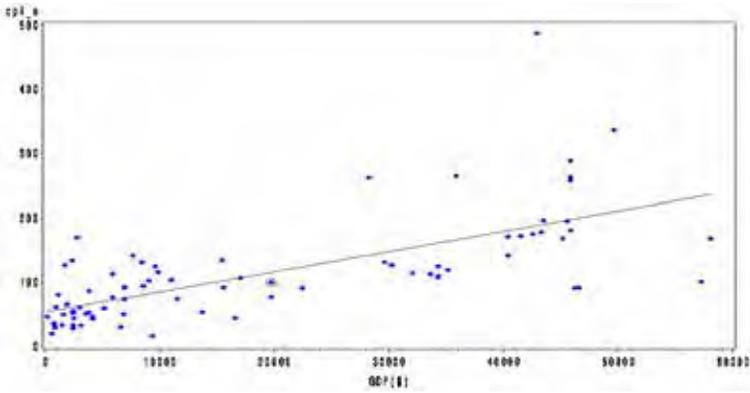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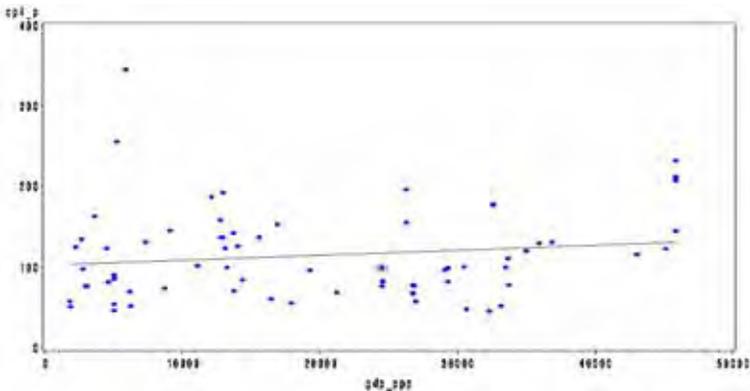


그림 14. 세계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 분포도(구매력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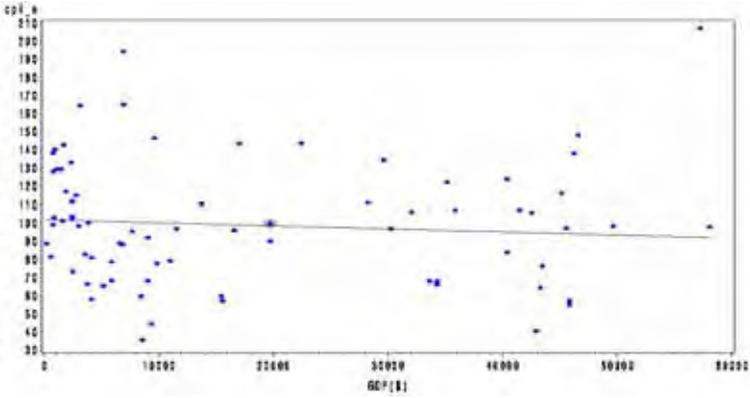
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회귀선 주변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서울의 소비자물가 수준이 1인당 GDP를 감안하더라도 비교대상 전체 도시의 중간수준임을 의미한다. 조사대상 전체 도시의 생활물가지수와 생활필수품물가지수 분포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분포와 흡사하다.

2) 동일브랜드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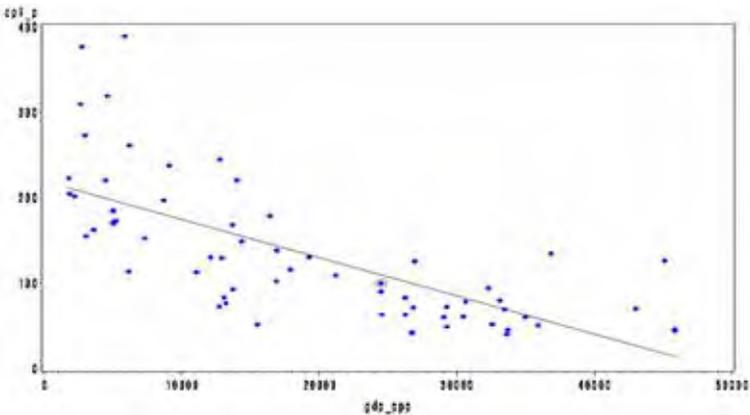
서울의 동일브랜드물가지수는 소득수준을 함께 고려할 때 비교대상 전체 도시의 중간수준이다. 이는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이 1인당 GDP와 동일브랜드물가지수 간의 회귀선에 바로 인접해 있다는 것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비교대상 전체 도시의 동일브랜드물가지수 분포는 앞에서 살펴본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및 생필품물가지수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동일브랜드 물가 수준이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널리 유통되는 유명 브랜드 상품의 가격이 저소득국에서는 비교적 높고, 고소득국에서는 비교적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물가지수 및 1인당 GDP를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 그림 15. 세계 도시의 동일브랜드물가지수 분포도(원율 기준)



| 그림 16. 세계 도시의 동일브랜드물가지수 분포도(구매력평가 기준)



3)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

16개 부문별로 조사대상 전체 도시의 1인당 GDP와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 간의 회귀선을 기준으로 서울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16개 부문을 고물가 부문, 저물가 부문, 중고물가 부문, 중저물

가 부문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서울이 회귀선보다 훨씬 높은(낮은) 곳에 위치하는 부문을 고물가 부문(저물가 부문), 서울이 회귀선 가까이에 위치하되 회귀선보다 약간 높은(낮은) 곳에 위치하는 부문을 중고물가 부문(중저물가 부문)이라고 하면, 서울의 부문별 물가 수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19. 서울의 부문별 물가 수준

부문		OECD 도시와 비교 시	주요 경쟁국 도시와 비교 시
고물가 부문	식료품	매우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신발		
	의류		
	이·미용		
	차·음료		
중고물가 부문	가사용품/서비스	- 환율 기준: 낮은 편	중간수준
	차량연료/운영비	- PPP 기준: 높은 편	
중저물가 부문	가구·전자제품	- 환율 기준: 낮은 편 - PPP 기준: 높은 편	중간수준
	교양·오락		
	외식·숙박		
	교육		
저물가 부문	교통요금	매우 낮은 수준	매우 낮은 수준
	주거·수도·광열비		
	주류·담배		
	통신요금		
	보건의료		

4. 품목별 국내외 가격차이 현황

(1)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품목군

1) 자료 및 분석방법

한국을 포함한 세계 69개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 251개 및 동일본랜드 품목 102개의 가격을 조사하여 국내 가격과 비교하였다. 69개국 도시 전체를 포함한 분석뿐 아니라 OECD 회원국, 주요 경쟁국 및 유사소득국으로 분류한 분석도 추가하였다. 주요 경쟁국에 미국(뉴욕),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브라질(상파울루), 러시아(모스크바), 인도(뉴델리), 대만(대만), 싱가포르, 홍콩을 포함하였다. 유사소득국에는 2007년 기준으로 국가별 1인당 GDP가 한국(19,751달러)과 유사한 국가인 이스라엘(22,475달러), 체코(17,070달러), 대만(16,606달러), 오만(15,584달러), 사우디아라비아(15,481달러)를 포함하였다. 해당 도시에 조사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자료가 없는 것(missing data)으로 처리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⁵⁾

본 분석은 국가별 현지 가격을 조사기간(2008년 3월) 달러 기준 환율과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⁶⁾ 각 품목마다 국가별 가격지수의 순위를 선정하고 해당 품목의 국내 가격지수가 10분위 중 어느 분위에 포함되는지를 조사했다. 일반 품목

5) 조사되지 못한 국가의 품목가격은 세계 도시, OECD 회원국, 경쟁국, 유사소득국과의 비교분석에서 각각 제외되었다.

6) OECD 회원국의 경우 2007년 구매력지수가 발표되어 분석에 이용할 수 있었으나, OECD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세계 도시, 주요 경쟁국, 유사소득국과의 비교에서는 가용한 2005년 구매력지수를 이용하였다.

을 종류별로 20개 품목군(식료품, 차와 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구 및 전자제품, 가사용품·서비스, 보건의료, 차량연료·운영비, 교통수단 이용료, 정보통신, 교양·오락, 교육, 외식·숙박, 이·미용, 공단체비용, 운송, 원자재, 관공서 요금)으로 분류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조사대상국가와의 비교에서 달러 기준 및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국내 가격이 상위 30% 안에 드는 품목이 많은 품목군을 고가 품목군으로 보고, 하위 30%에 드는 품목이 많은 품목군을 저가 품목군으로 판단하였다.

2)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품목군

국내외 가격차이를 조사한 결과, 국내 가격이 비싼 품목은 주로 실생활과 관련된 품목군에 속하였다. 국제가격 비교에서 국내 가격이 비싼 품목이 가장 많이 포함된 품목군은 식료품이었다. 식료품군의 경우 조사대상 품목의 68%가 달러 환율 기준으로 세계 도시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가의 가격수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비싼 품목이 많았던 품목군은 의류 제품군이다. 가사용품 및 서비스 품목군도 국제 가격 비교에서 국내 가격이 높은 품목이 많았다. 반면에, 국내 가격이 국제 수준보다 저렴한 품목들이 많이 포함된 품목군은 정보통신 품목군과 원자재 품목군이었다. 정보통신 품목군의 경우 조사대상 품목의 67%가 달러 환율 기준으로 세계 도시 중 하위 30%에 속하는 저가의 가격수준을 나타내었다.

(2) 현저한 가격차이가 나타난 품목

1) 고가 품목

가. 식료품

식료품목 중 세계 도시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품목은 밀가루(1kg), 쇠고기등심(1kg), 올리브유(1ℓ)이다. 밀가루(1kg)의 경우 달러 기준으로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 평균의 1.5배로 높았으며, 이는 세계 도시 중 5위에 해당하는 가격수준이다. 2005년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밀가루의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 평균의 1.4배로서 12위에 해당하며, OECD 회원국과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국내 밀가루가격이 가장 높았다. 쇠고기 등심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 평균의 4.2배로서 세계 도시 중 3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밀가루의 국내 가격이 세계 평균의 4배였으며, 이는 홍콩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올리브오일(1ℓ)의 경우 달러 기준으로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 평균의 2배에 달하였으며, 이는 세계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5년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세계 도시 중 9위에 해당한다(세계 평균의 1.7배).

그 밖에 냉동참치(1kg), 닭가슴살(1kg), 쇠고기안심(1kg), 돼지고기 목살(1kg), 양배추(1kg), 씨리얼(375g) 또한 국내 가격이 세계 도시와 비교하여 높은 식료품목이다. OECD 회원국과 국내 가격을 구매력 지수로 비교할 경우 특별히 높게 나타난 식료품은 사과(1kg), 오렌지(1kg), 레몬(1kg), 바나나(1kg) 등 과일 종류였다. 동일브랜드 제품인 델몬트 오렌지(1kg)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6위(스페인, 스위스,

파나마, 일본, 터키 다음으로 높았음)였고, 세계 도시 평균 수준의 1.3배였다. 구매력 기준으로도 6위에 해당하였다(세계 도시 평균의 1.3배).

나. 의류제품

의류제품 중 세계 도시와 비교하여 특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품목은 스타킹(1켄레, 대형 백화점 판매), 와이셔츠(1벌, 대형 백화점 판매), 아동용 청바지(1벌, 대형 백화점 판매), 성인용 청바지(1벌, 대형 백화점 판매)이다. 스타킹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 평균의 3배에 달하였으며, 세계 도시 중 가장 높았다. 2005년 구매력 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의 2.9배였으며, 세계 도시 중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와이셔츠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 평균의 2.5배였으며, 이는 세계 도시 중 3위에 해당하였다. 2005년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세계 도시 평균의 2.2배였으며, 이는 4위에 해당한다. 아동용 청바지 및 성인용 청바지의 경우 세계 도시 중 달러 기준으로 국내 가격이 두 품목 모두 6위로 나타났다. 달러 기준으로 아동용 청바지의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 평균의 1.9배였으며, 성인용 청바지의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 평균의 1.8배였다.

다. 가사용품 및 서비스 품목

가사용품 및 서비스 품목군 중 세계 도시와 비교하여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품목은 치약(150g), 칫솔(1개), 화장비누(1개), 화장지(1통), 섬유유연제(1ℓ)이다. 이들 품목은 세계 도시와의 가격비교에서 달러 기준으로 모두 상위 10%에 드는 품목이다. 치약(150g)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 평균의 2.4배에 달하였고, 이

는 세계 도시 중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05년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세계 도시 가격과 비교하면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 평균의 2.1배였으며, 이는 2위로 높은 수준이다. 칫솔의 경우 달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 평균의 2.2배로서 세계 3위에 해당하였다. 2005년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세계 도시 평균의 2배였고, 세계 2위로 높은 수준이다. 화장비누 및 화장지의 경우 달러 기준으로 국내 가격은 각각 세계 도시 평균의 2.5배 및 2.7배였으며, 이는 세계 도시 중 6위와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05년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화장비누 및 화장지의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 평균의 2.3배 및 2.4배였고, 이는 각각 7위와 5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섬유유연제(1ℓ)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 중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2005년 구매력 기준으로도 세계 도시 중 가장 높았다. 달러 기준 및 구매력 기준으로 각각 세계 도시 평균의 5배 및 4.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라. 기타 고가 품목

국제 가격비교에서는 고가의 품목이 다수 포함된 품목군은 아니었지만, 품목 자체만으로 국내 가격이 현저하게 높은 품목으로는 골프장 그린피와 공업단지 매입가(m^2)를 들 수 있다. 골프장 그린피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 평균의 2.4배였으며, 이는 세계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5년 구매력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 평균의 2배였으며, 세계 도시 중 6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공업단지 매입가(m^2)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 평균의 3.7배에 달하며, 이는 세계 도시 중 5위에 해당하는 가격수준이다.

2) 국내 가격이 낮은 품목

가. 정보통신

정보통신 품목 중 세계 도시와 비교하여 특별히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품목은 시내통화요금(3분),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기준), 인터넷 가설비(최소 DSL 기준), 인터넷 월 사용료(최소 DSL 기준)였다. 시내통화요금(3분)의 국내 요금은 달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 평균의 23%에 불과하였고, 이는 세계 도시 중 11번째로 저렴한 수준으로서 하위 20%에 포함되었다. 2005년 구매력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시내통화의 국내 요금은 세계 도시 평균 가격수준의 20%에 불과하였고, 이는 세계 도시 중 다섯 번째로 저렴한 수준이었다.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기준) 요금의 경우 달러 기준으로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 평균의 30% 수준이었으며, 이는 세계 도시 중 16번째로 저렴한 수준으로서 하위 30%에 포함되었다. 2005년 구매력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국내우편 요금은 세계 도시 평균의 26% 수준으로서 세계 도시 중 일곱 번째로 저렴하였다. 인터넷 가설비(최소 DSL 기준) 및 인터넷 월 사용료(최소 DSL 기준)의 국내 가격도 달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와 비교한 결과 하위 30%에 포함되었다. 인터넷 가설비(최소 DSL 기준)의 국내 요금은 달러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세계 도시 평균의 29%에 해당하였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세계 도시 평균의 24% 수준이었다. 인터넷 월 사용료(최소 DSL 기준)의 국내 요금은 세계 도시 평균의 42%였으며, 구매력 기준으로는 세계 도시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나. 원자재

국내외 가격차이 조사에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 원자재 품목은 형강(1t), 열연광폭대강(1t), 시멘트(벨크타입 톤 기준)이다. 형강(1t)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조사대상 세계 도시 평균의 69% 수준이었으며, 이는 조사대상 세계 도시 중 4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연광폭대강(1t)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조사대상 세계 도시 평균의 70% 수준이었고, 이는 조사대상 도시 중 4번째로 낮았다. 시멘트(벨크타입 톤 기준)의 국내 가격은 조사대상 세계 도시 평균의 51% 수준이었으며, 이는 조사대상 세계 도시 중 다섯 번째로 저렴한 수준이었다.

다. 기타 품목

정보통신 및 원자재 부문 이외에 주거 및 수도·광열 부문에서 국내 가격이 국제적 비교에서 저렴한 품목이 나타났다. 특히 주거 및 수도·광열 부문에서는 케이블TV 이용료(1개월)가 현저하게 저렴한 품목이었다. 국내 케이블TV 이용료(1개월)는 달러 환율 기준으로 조사대상 세계 도시 평균의 30% 수준이었으며, 2005년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세계 도시 평균의 26% 수준이었다. 달러 기준 및 2005년 구매력 기준으로 하위 20%에 포함되었다.

3)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품목의 특징

국내외 가격차이 비교분석에서 국내 가격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주로 식료품, 의류제품, 가사용품 및 서비스 품목 등이 속해 있다. 국내 가격이 높게 나타난 품목들은 공업단지 매입가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 가계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들이다. 가구 및 전자제품, 교양·오락, 차량연료 및 운영비, 외식·숙박 등의 품목군의 경우 국제 비교에서 국내 가격이 중간수준을 나타낸 품목이 많았다. 한편, 정보통신 및 원자재 등의 품목군이 국제 비교에서 저렴한 가격수준을 나타냈다. 정보통신요금 중 현저하게 낮은 품목들은 주로 공공서비스(public utility) 정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다. 원자재나 운송비의 경우 국제 비교에서 저렴하게 나타나지만 소비자 생활물가와는 관계가 먼 품목들이다. 국내 가격이 현저하게 높은 품목들 중 밀가루, 쇠고기등심, 쇠고기안심, 돼지고기목살, 사과, 양배추, 이동용청바지, 성인용청바지 및 화장지는 모두 생필품물가 품목에 해당하는 반면, 국제 비교에서 국내 가격이 현저하게 낮았던 품목 중 생필품물가 품목에 포함되는 것은 케이블TV 이용료와 중학교 수업료이다. 공공요금이나 중간재의 국내 가격이 국제 비교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생활필수품의 국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국내 물가 수준은 실제 국제 비교 수준보다 높을 수 있다. 국제 수준보다 비싼 품목이 주로 식료품, 의류제품, 가사용품 등이어서 일상생활과 관계 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민의 체감물가 수준이 국제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제 가격비교에서 분석대상 국가 분류의 중요성

품목별 국내 가격의 국제 비교에서 국내 가격이 국제 평균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품목도 있었고 현저하게 낮은 품목이 있었다. 품목별 가격비교에서 달러가격으로 비교할 경우와 구매력지수로 비교

할 경우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국내 가격을 OECD 회원국 가격과 구매력지수로 비교할 경우 현격하게 드러난다. 대체로 국내 가격을 세계 도시와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보다 OECD 회원국 도시와 구매력지수로 비교한 경우 국내 가격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보다 구매력이 높은 국가의 도시와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보다 구매력 수준이 낮은 국가가 포함된 경쟁국 도시의 가격과 구매력 지수로 비교한 경우에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한 경우보다 국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러한 특징은 국제 비교에서 국내 가격이 상위 30%와 하위 30%에 속하는 품목수의 비교국가별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매력지수로 비교한 결과, OECD 회원국과 비교한 경우에 상위 30%에 포함되는 품목수가 가장 많았으며 하위 30%에 포함되는 품목수가 가장 적었다.

표 20.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품목 수

구분	세계 도시		OECD 회원국		주요 경쟁국		유사소득국	
	환율 기준	2005년 PPP 기준	환율 기준	2007년 PPP 기준	환율 기준	2005년 PPP 기준	환율 기준	2005년 PPP 기준
상위 30%에 포함되는 품목 수	98	85	64	137	83	74	72	75
하위 30%에 포함되는 품목 수	41	53	97	39	53	68	48	86

이러한 특징은 외국제품을 수입하는 동일브랜드 품목에서도 나타난다. 수입 맥주, 수입 골프제품, 외제차, 수입 전자제품 등의 경우 OECD 회원국과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국내 가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세계 도시 전체나 주요 경쟁국과의 비교에

서는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OECD 회원국에는 미국, 서유럽 국가, 일본 등 한국보다 구매력이 높은 국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세계 도시 전체나 주요 경쟁국에는 대만, 러시아, 중국 등 구매력이 유사하거나 낮은 국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ECD 회원국이나 주요 경쟁국 등 한 가지로 한정된 국가군과 비교할 경우 편향된 가격비교 분석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품목별로 국내의 가격차이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을 특정한 국가군으로 한정해서 비교하기보다는 다양한 국가군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외 가격차이를 조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감안하여 분석할 경우 기존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달리 동일브랜드 제품의 국내 물가 수준은 GDP 수준을 감안하여 세계 도시 중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GDP 수준을 고려하여 동일브랜드의 품목별 가격을 구매력지수로 비교할 경우 국내 가격수준은 추세선보다 낮다.

| 그림 17. 가격지수와 1인당 GDP의 추세(환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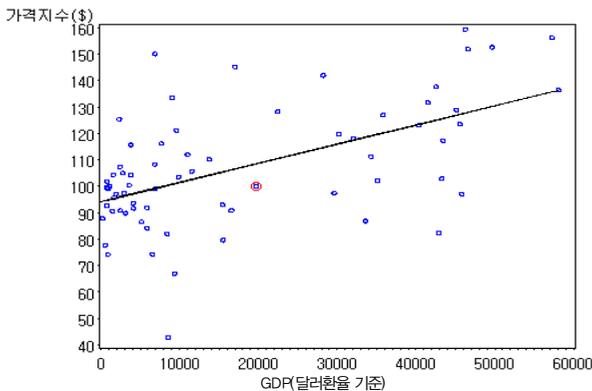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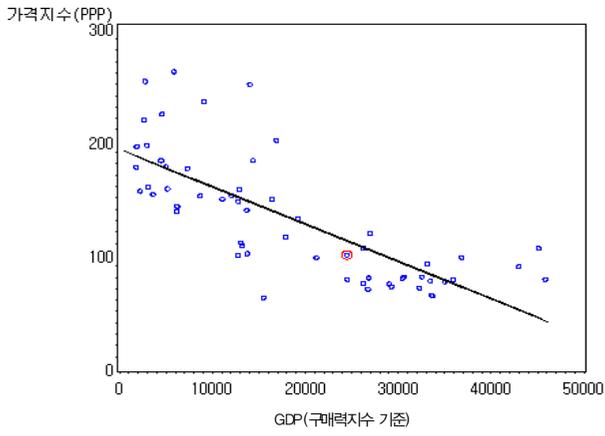


그림 18. 가격지수와 1인당 GDP의 추세(구매력지수 기준)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총론)

제4장
품목별 사례분석





품목	발생요인	내용	대안
쌀	고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생산비는 중국과 미국보다 각각 55배, 2.5배 높음. - 토지용역비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각각 4.7배, 12.7배 높음 - 노력비도 중국과 미국에 비해 각각 4.3배와 3.3배가 높은 수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근본적으로 토지 가격이 높고 노임 단가가 높거나 노동 투입량이 많으므로 생산비 절감에 한계가 있음. -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현재의 수요량의 5%에서 매년 5%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저효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수(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미국과 중국에 비해 9~22% 정도 낮음. 	
쇠고기	고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나 호주의 육우 두당 생산비는 한국의 25% 수준임. - 한국은 경영비 중 가축비(송아지 구입비용) 비중이 6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호주나 미국에서는 가축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 한국에서는 암소가 송아지를 평균적으로 24회 생산하지만 미국은 5~6회 생산하므로 한국의 가축비가 높을 수밖에 없음. - 또한 한국은 경영비 중 사료비 비중이 3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높지만 미국과 호주에서는 목초사육(방목)을 하므로 사료비 지출액이 크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나 호주산 쇠고기에 관세 40%와 제비용 10%를 부과 후에도 한국의 판매가격의 41~55% 수준에 불과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미국산 및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음. - 쇠고기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축산업의 대형화가 필요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영세규모의 축산가구의 타 업종으로의 구조조정을 유도함.
우유	고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우유 생산비가 미국보다 20% 정도 높음. - 사료비가 1.6배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의 경영비 중 사료비 비중이 72~76%로 높지만 미국의 사료비 비중은 37%에 불과 - 미국의 농가 호당 사육두수는 121두인데 반해 한국은 56두로 생산비 차이는 생산규모의 차이에서도 기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 농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육두수 규모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음.

품목	발생요인	내용	대안
오렌지주스	고비용	- 오렌지주스의 원료인 오렌지에 대한 관세율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오렌지에 대한 관세율은 50%로 다른 나라(대만 20%, 중국 11%, EU 14.7%, 캐나다 0%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	- 수입과일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다른 국가 수준으로 낮추어 가격인하를 유도 - 음료업종과 같이 시장집중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불법적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
	높은 시장 지배력	- 국내 음료업종의 시장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맥주	고세율	- 주세(교육세 포함)와 부가가치세가 맥주가격의 53%로 미국 14.2%, 영국 33.3%, 일본 42.4%, 덴마크 31.2%보다 크게 높음. - 맥주의 주세율은 72%로 알코올 함유량이 훨씬 높은 위스키 등 증류주의 세율과 동일 - 수입 맥주에 30%의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미국, 일본, 영국, 덴마크 등에서는 무세임.	- 알코올 함유량이 낮은 맥주의 주세율을 합리화할 필요 - 국가 간 세금부담비율 비교결과를 참조하여 주류의 세금부담비율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세율을 조정할 필요 - 주세는 징벌적 조세이므로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현행 중가세 방식의 주세부과 방식을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누적적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주세(교육세 포함)와 부가가치세가 위스키가격의 53%로 일본 9.4%, 미국 15.4%, 런던 44.2%보다 크게 높은 수준 - 수입위스키에 30%의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는 무세임.	- 주세는 징벌적 조세이므로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현행 중가세 방식의 주세부과 방식을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누적적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물가 안정차원에서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위스키	고세율	- 주세(교육세 포함)와 부가가치세가 위스키가격의 53%로 일본 9.4%, 미국 15.4%, 런던 44.2%보다 크게 높은 수준 - 수입위스키에 30%의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는 무세임.	- 주세는 징벌적 조세이므로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현행 중가세 방식의 주세부과 방식을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누적적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물가 안정차원에서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남성정장	브랜드 파워	- 대형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국내 남성정장의 가격은 환율 및 구매력지수로 계산한 세계 도시 평균의 1.5배 (구매력지수로 비교하면 국내 가격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정도) - 국내 제조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지출이 많음. - 국내 제조업체 제품의 브랜드파워가 높아 대리점 등 고객중심의 유통구조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판매수수료 비중이 높음.	- 제품 인지도에 따른 브랜드파워에 따라 가격차이가 형성된 것으로서 별도의 정책적 대안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품 목	발생 요인	내 용	대 안
여성 구두 (백화점 구입)	유통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 구입 여성구두의 가격은 시장환율 및 구매력평가 적용 시 모두 세계 최고 수준 - 매출원가 대비 판매관리비의 비중이 큰 편 - 판매촉진비(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위탁수수료 등 판매과정과 관련된 수수료의 비중이 높은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판매관리비용을 줄일 필요 - 신발유통시장의 대형화를 통해 유통 및 비용구조 개선
침대	고 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미국 중국이 매트리스 및 침대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8% 관세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제품의 수입 증진을 통한 가격인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세 인하 추진
	시장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구조가 고도로 집중(CR3는 89.85%, HHI지수는 4,166;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CR3는 대략 62% 정도) - 이러한 과점적 시장구조는 국내 기업의 높은 경쟁력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음. 	
휘발유 및 경유	고 세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연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부담비율이 각각 55.7%와 47%로 OECD 평균을 상회 - 미국의 세금부담비율은 무연휘발유 129% 경유 148%로 우리보다 크게 낮은 수준 - 일본의 세금부담비율은 무연휘발유 40.6%, 경유 28.6% - 원유 수입에 3%의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연말까지 1%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 다른 국가들은 무세 또는 무세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가격 급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율뿐만 아니라 유류 소비세율의 인하를 고려할 필요

품 목	발생 요인	내 용	대 안
휴대 전화 사용료	고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순매출 대비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합한 영업비용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특히 순매출 대비 판매관리비의 비중이 비교대상국에 비해 상당히 높음. - 영업비용 중 가입청약수수료 및 관리수수료를 포함한 지급수수료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가격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가입청약수수료 및 관리수수료를 절감하여 영업비용의 비중을 낮출 필요 - 예를 들어 직영대리점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비용구조를 개선
LCD TV	높은 시장 지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D TV 경우 국내외에서 조사된 가격의 많은 경우가 동일한 회사의 제품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가격이 해외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이 회사의 세계시장점유율 20%를 조금 넘는 반면 국내시장점유율은 50%에 육박하여 점유율 차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진입장애가 없는 시장에서 특정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 회사의 경쟁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인하를 위한 특별한 대안이 없음 다만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불법적 경쟁제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음.
데스크톱	높은 시장 지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데스크톱 시장에서 특정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40%를 넘고 있으며 이 같은 높은 시장지배력은 가격결정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부여함. 	상동
HWP (Hard Wood Pulp)	높은 시장 지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펄프시장은 국산과 수입품이 공존하는 경쟁적 시장이며 국산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은 아님. - 하지만 국산 펄프를 생산하는 업체는 한 곳이므로 안정적인 펄프공급을 원하는 제지회사에 대해 국내 펄프 제조회사가 가격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국산품이 수입품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펄프 제조업체는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펄프시장 자체는 경쟁적이고 해당 산업의 수익성도 높지 않으므로 추가 진입이 없는 상태임 - 단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 없는지를 관찰할 필요는 있음.

품 목	발생 요인	내 용	대 안
에틸렌	규모의 경제	· 시설단위당 생산능력이 대만, 일본 등에 비해 우위에 있으나, 미국보다는 열위에 있음.	· 기업 규모 대형화 · 납사 수입선 다변화
	원료 경쟁력	· 납사의 원료경쟁력은 에탄에 비해 낮으나 천연가스에 비해서는 높음.	· 원가절감 및 생산효율 향상 · 대체원료의 사용확대 지원
햇코일	생산 효율 및 정부통제	· 포스코의 생산효율이 높고, 정부의 가격통제가 작용	·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 · 에너지효율의 개선
시멘트	업체 간 경쟁	· 국내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세전수익과 마진이 매우 낮음.	· 폐기물 재활용 증대 · 물류 합리화
특급호텔 1박 요금	고비용	· 순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이 비교대상국에 비해 높은 수준 · 부대시설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금용비용을 높여 가격경쟁력 저하시킴. · 특1급 위주의 산업구조는 시설투자부담을 높이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부대시설부문에 비해 매출 원가가 낮은 객실부문의 수입을 증대시킬 필요 · 산업 전체로 보아서는 중저가 호텔의 공급 확대를 통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
스킨·로션·에센스	고관세율	· 한국은 현재 화장품에 대해 8%의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국을 제외하고는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장품은 무관세 수입품목	· 외국제품의 수입 증진을 통한 가격인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세 인하 추진 · 병행수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 · 현행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민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진입장벽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 12월 31일 공포한 고시(제1998-18호)를 통해 화장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화장품법 시행규칙(제7조)으로 인하여 병행수입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시행규칙 7조는 모조제품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병행수입시 외국 제조업체의 제조 판매증명서를 한국의 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한국의 물가구조 및 국내외 가격차이 해소방안(총론)

제5장
유형별 발생요인 및 해소방안





품목별 국가 간 가격차이의 원인 중에서 본 절에서는 임금, 산업 단지 분양가, 재료비 및 금융비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생산자 및 판매자의 가격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소들의 현 수준 및 시계열적 추세를 살펴보고 우리와 유사한 소득군에 속한 국가 및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각 요인들이 국내외 가격차이 발생에 어떻게 기여하여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1. 원가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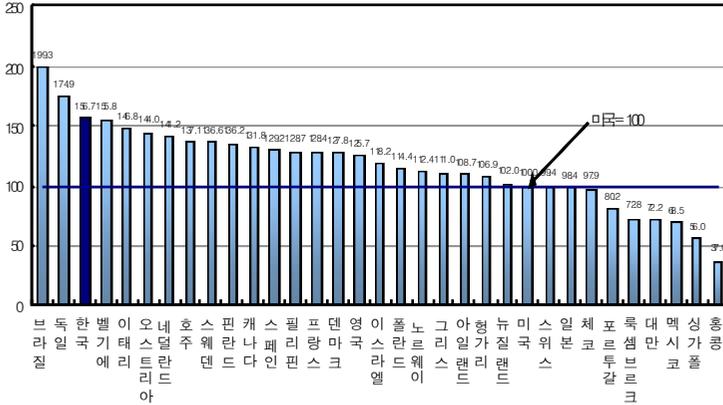
(1) 임금

미국 노동통계국(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자료에 근거하여 2006년 제조업 생산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14.7달러로 미국의 약 62% 수준에 해당하며 이는 비교가능 33개국 중에서 21위에 해당한다. 노르웨이(41.1달러), 덴마크(35.5달러)나 미국(23.8달러)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와 국제시장에서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8.6달러), 대만(6.4달러) 및 홍콩(5.8달러)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2006년 사이에 제조업 시간당 임금이 78.9%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체 비교대상 33개국 중에서 7위에 해당하며 싱가포르(17.1%), 홍콩(6.1%), 대만(3.9%)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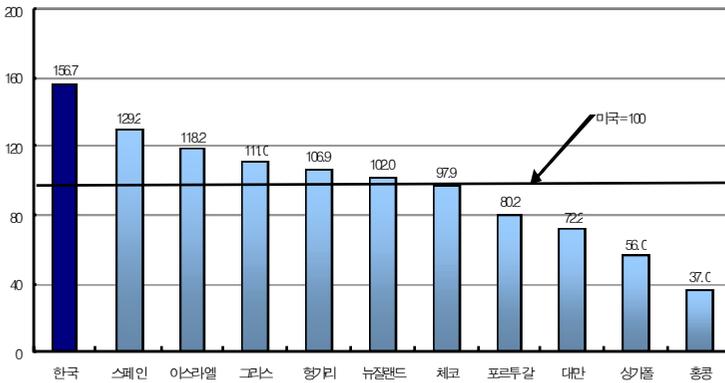
그림 19. 제조업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한 상대임금(2006년 기준)

(미국=100)

전체 비교대상국



유사소득국



주: 대만과 이스라엘의 경우 GNI 대신 GDP 사용하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한 상대임금은 시간당 임금지수(미국=100)를 1인당 국민소득지수(미국=100)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www.bls.gov),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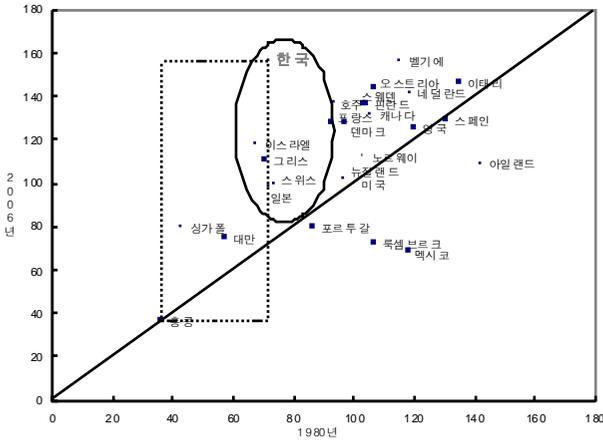
각국의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분석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06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인 국가들만을 고려할 경우 2006년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수준은 비교대상 11개국⁷⁾ 중에서 3위에 해당한다. 또한 비교대상 11개국 중에서 2000~2006년 임금 상승률은 4위를 기록했다. 더욱 광범위한 비교를 위해, 각국의 시간당 임금지수를 1인당 국민소득지수로 나누어 상대임금을 계산한 결과가 <그림 19>에 나와 있다. 우리나라의 상대임금은 2006년 156.7(미국=100)로 브라질(199.3), 독일(174.9)에 이어 비교대상국 33개국 중에서 3위에 해당한다. 이런 수준은 우리와 유사한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보이는 11개국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인 대만(72.2), 싱가포르(56.0), 홍콩(37.0)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그림 19> 하단 참조). 따라서 현재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이런 고임금은 제조업 고비용의 한 원인이라고 하겠다.

상대임금의 장기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20>은 x축에 1980년 상대임금을 y축에 2006년 상대임금을 표시하여 지난 20여년간 각국의 상대임금 상승을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임금의 상승폭이 비교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크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1980년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상대임금을 가졌던 이스라엘, 그리스, 스위스, 일본(<그림 20>의 타원형)에 비해 지난 20여년간 월등히 높은 상대임금 상승을 보였다. 또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그림 20>의 직사각형)과 비교하여 보면 이 국가

7) 여기에는 한국, 스페인, 이스라엘, 그리스, 헝가리, 뉴질랜드, 체코, 포르투갈,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포함된다.

들은 1980년에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대임금을 가졌으며 2006년에 와서는 그 차이가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한 제조업 상대임금은 유사소득군에 속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빨리 증가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20. 제조업의 상대임금 장기 변화(1980~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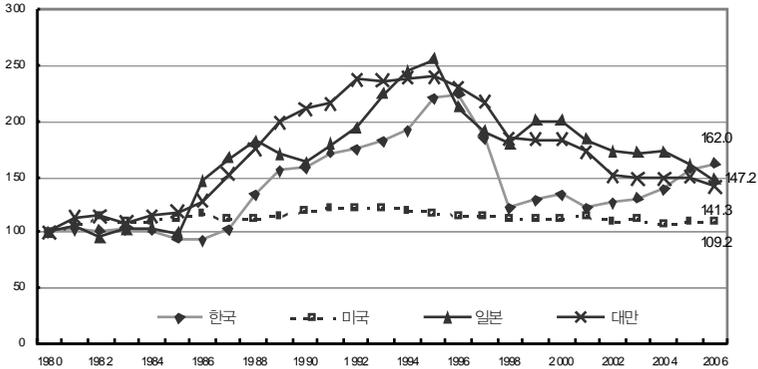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www.bls.gov)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부합하는 임금 상승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임금 상승을 비교하기 위해 단위노동비용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시간당 명목임금의 증가가 시간당 산출량의 증가를 초과하는 경우 단위노동비용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인건비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한다면 노동비용의 증가가 생산비용의 증가를 유도하게 되고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⁸⁾

8) 단위노동비용의 경우 노동의 생산성이 시간당 산출량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노동

그림 21. 단위노동비용의 변화(1980~2006년 기준)

(1980년=100)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그림 21>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대만의 단위노동비용 추이를 보여준다. 한국, 일본, 대만의 단위노동비용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약 10여 년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일본과 대만의 단위노동비용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2006년 현재 1980년대 중반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격한 감소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1980년 이후 20여 년간 한

이외에 자본축적과 같은 다른 생산요소의 증가가 시간당 산출량을 늘리는 효과와 기술진보에 의해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축적 및 기술진보가 시간당 산출량의 증가에 기여한 경우 시간당 산출량으로 측정된 노동의 생산성은 과대평가된다. 적정임금 수준과 관련하여 노동 및 자본의 상대적 기여를 측정할 허찬국 외(2007)에 의하면 “2000~2005년간 노동장비율의 변화를 감안한 적정 노동/자본 소득비율의 증가율은 거의 0%인 반면 같은 기간 노동/자본 소득비율은 연평균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중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했음을 감안할 때, 임금 상승률이 ‘노동의 기여’의 상승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하였다.

국의 단위노동비용은 약 62% 상승하였으며 특히 지난 2001년 이후 일본, 대만의 감소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약 33% 상승하였다. 따라서 시간당 산출량의 증가보다 빠른 수준의 임금 상승⁹⁾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생산비용의 증가와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임금은 1인당 소득을 감안했을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유사소득군과 경쟁대상국 사이에서는 최고수준에 이른다. 또한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임금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노동생산성의 증가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생산원가의 상승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물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이런 고임금구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임금 및 고용의 경직성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비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와 임금경직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 간의 단절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정규직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며 정규직시장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동시에 정규직 임금수준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장년 남성 위주의 노동시장에 여성층, 청년층, 그리고 노년층이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은 전

9) 일부에서는 지난 20여 년간의 임금 상승은 제조업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생산비용 상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노동생산성은 단위시간당 산출량을 기준으로 측정된 것이기에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즉 단위시간당 산출량을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판단한다면 여기에는 자본 및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증가 중 일부가 포함되므로 임금 상승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허찬국 외(2007) 참조

반적인 노동력 공급을 늘려 고임금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해결책이라 하겠다. 고학력 여성이 진출할 만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육아 및 출산, 그리고 자녀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를 수반하지 않는 노동력 고령화는 중장년층 노동력의 상대적 공급을 줄이므로 상대임금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며, 물가수준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또한 모색되어야 하며 이런 정책 역시 고물가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산업단지 분양가

생산원가를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지대와 관련된 항목들이다.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땅값은 주거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산업단지, 상가, 사무실의 분양가와 임대료를 높여 기업의 입지 관련 초기비용과 운영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는 생산의 고비용 구조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야기하고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절에서는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분양가격 수준을 살펴보고 또한 분양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또한 분양용 산업단지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임대용 산업단지의 임대료 및 공급수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표 21. 산업단지분양가지수 국제 비교(2008년 기준)

(서울=100)

순위	국가	도시명	지수	순위	국가	도시명	지수
1	우크라이나	키예프	155.4	33	뉴질랜드	오클랜드	9.1
2	중국	홍콩	146.1	34	미국	뉴욕	9.0
3	대만	타이베이	136.4	35	칠레	산티아고	8.2
4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115.0	36	페루	리마	8.2
5	한국	서울	100.0	37	호주	시드니	6.6
6	일본	도쿄	88.6	38	우즈베크	타슈켄트	6.4
7	콜롬비아	보고타	83.7	39	미얀마	양곤	6.3
8	일본	나고야	65.6	40	브라질	상파울루	6.0
9	스페인	마드리드	63.9	41	폴란드	바르샤바	4.7
10	미국	워싱턴	62.8	42	베트남	호치민	4.6
11	이탈리아	밀라노	59.1	43	중국	광저우	4.4
12	스위스	취리히	53.0	44	사우디	리야드	3.8
13	인도	뉴델리	51.3	45	요르단	암만	3.6
14	알제리	알제	50.4	46	벨기에	브뤼셀	3.2
15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48.9	47	중국	칭다오	2.7
16	불가리아	소피아	40.0	48	중국	상하이	2.4
17	카자흐스탄	알마티	36.0	49	덴마크	코펜하겐	2.4
18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33.0	50	캄보디아	프놈펜	2.1
19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8.8	51	오스트리아	빈	2.0
20	미국	시카고	27.6	52	이란	테헤란	1.7
21	일본	오사카	25.2	53	체코	프라하	1.6
22	카사블랑카	모로코	20.0	54	파키스탄	카라치	1.5
23	싱가포르	싱가포르	18.9	55	헝가리	부다페스트	1.2
24	태국	방콕	18.6	56	멕시코	멕시코시티	1.1
2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8.0	57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1.0
26	스웨덴	스톡홀름	17.8	58	이집트	카이로	0.8
27	영국	런던	16.5	59	캐나다	토론토	0.8
28	오만	무스카트	15.4	60	스리랑카	콜롬보	0.6
29	터키	이스탄불	14.2	61	리비아	트리폴리	0.3
30	과테말라	과테말라	12.9	62	도미니카	산토도밍고	0.3
31	파나마	파나마	12.8	63	케냐	나이로비	0.2
32	프랑스	파리	12.0	64	필리핀	마닐라	0.1

<표 21. 계속>

평균			
전 세계(서울 제외)	26.3	아시아·대양주	30.0
아시아(일본 제외)	39.0	북미	25.0
유럽	21.6	서유럽	25.6
일본	59.8	중국(홍콩 제외)	3.2

주: 2007년 기준 환율을 적용한 가격을 지수화(서울=100)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및 KOTRA 세계 주요도시 물가조사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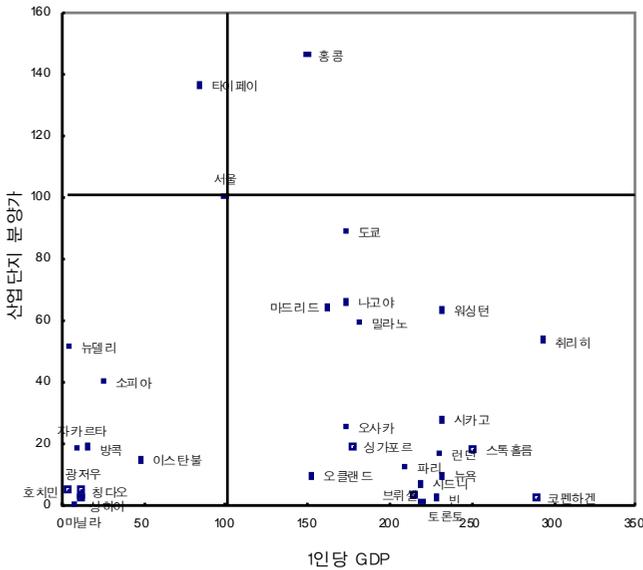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지난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경제연구원과 KOTRA가 2008년 공동으로 조사한 세계 주요도시 물가 수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산업단지 분양가의 비교가 가능한 도시들을 추출하여 <표 21>에 정리하였다. 서울 산업단지 분양가 수준은 비교가능한 64개 도시 중에서 5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 세계 평균 26.3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평균 39.0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동시에 북미지역(25.0)이나 유럽지역(21.6)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며, 특히 홍콩을 제외한 중국 여러 도시의 평균(3.2)에 비하면 약 30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산업단지 분양가는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에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대도시의 산업단지 분양가와 소속 국가의 1인당 GDP 분포를 우리나라 서울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2>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1인당 GDP를 보이는 국가 중에서 대만의 타이베이, 중국의 홍콩만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산업단지 분양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훨씬 높은 일본, 미국 및 유럽국가들 역시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산업단지 분양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쟁국 중 하나이며 1인당 GDP가 높은 싱가포르의 산

업단지 분양가 역시 서울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림 22. 산업단지 분양가 및 국민소득

(서울=100)



주: 2007년 기준 환율을 적용한 산업단지 분양가 및 1인당 GDP를 지수화(서울=100)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및 KOTRA 세계 주요도시 물가조사 데이터베이스

높은 산업단지 분양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높은 지대와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의 증가이다. 토지보상비는 대체적으로 지가에 연동한다. 따라서 높은 지가는 높은 토지보상비를 유발하고 산업단지 분양가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 지가 총액은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1990년대에는 그 증가율이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와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지가총액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 시기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산업단지 분양가 역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 토지보상비가 증가¹⁰⁾하고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상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임대산업단지제도와 임대전용산업단지제도를 통해 임대용 산업단지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방산업단지 내 일부를 임대용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제도이며, 임대전용산업단지제도는 사업시행자가 임대용으로 조성한 산업단지에 대해 정부가 조성원가의 30%를 보조함으로써 임대료를 낮추는 제도이다. 이러한 임대용 산업단지의 임대료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 <표 22>는 한국경제연구원-KOTRA 세계 주요도시 물가조사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여 작성된 산업단지 월임대료 국제 비교를 보여준다. 비교대상 63개 도시 중에서 서울은 58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산업단지 월임대료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산업단지 월임대료는 기업의 초기투자 비용을 낮추어 생산원가를 낮추고 나아가 물가 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용 산업단지의 공급물량이 부족하여 산업용지를 구하고 있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수(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용지 중에서 임대용 산업용지는 2.8%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2007)에 의하면 현재 분양중인 국가산업단지는 총 23곳으로 총 미분양 면적은 총 2,843만㎡에 달하는데 그 중 임대용으로 설립되었거나 조성중인 곳은

10) 실제로 산업단지용 토지보상비는 전국 공시지가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국토해양부(2008)에 의하면 1997년 이후 우리나라 공시지가는 연평균 8.0% 상승한 반면 산업단지용 토지보상비는 같은 기간 연평균 14.1% 증가하였다. 이렇게 토지보상비가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개발이익이 토지보상비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다.

표 22. 산업단지 월임대로 국제 비교(2008년 기준)

(서울=100)

순위	국가	도시명	지수	순위	국가	도시명	지수
1	스웨덴	스톡홀름	31192	33	오스트리아	빈	1833
2	미국	워싱턴	28369	34	헝가리	부다페스트	1801
3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22126	35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1793
4	프랑스	파리	20164	36	도미니카	산토도밍고	1627
5	이탈리아	밀라노	20164	37	태국	방콕	1490
6	미국	시카고	19764	38	중국	베이징	1403
7	러시아	모스크바	15073	39	인도	뉴델리	1178
8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13195	40	멕시코	멕시코시티	1176
9	벨기에	브뤼셀	11365	41	일본	오사카	802
10	우크라이나	키예프	9511	42	카사블랑카	모로코	799
11	독일	프랑크푸르트	8432	43	일본	나고야	730
12	영국	런던	4497	44	파테말라	파테말라	710
13	미국	뉴욕	4019	45	일본	도쿄	634
14	뉴질랜드	오클랜드	3745	46	중국	상하이	601
15	폴란드	바르샤바	3630	47	싱가포르	싱가포르	597
16	중국	홍콩	3609	48	캄보디아	프놈펜	475
17	요르단	암만	3330	49	파키스탄	카라치	452
18	카자흐스탄	알마티	3291	50	중국	광저우	368
19	체코	프라하	2910	51	중국	칭다오	284
20	스페인	마드리드	2750	52	쿠웨이트	쿠웨이트	239
21	불가리아	소피아	2728	53	스리랑카	콜롬보	204
22	독일	뮌헨	2658	54	리비아	트리폴리	197
23	이란	테헤란	2613	55	오만	무스카트	154
24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2577	56	필리핀	마닐라	106
25	칠레	산티아고	2364	57	이집트	카이로	104
26	대만	타이베이	2319	58	한국	서울	100
27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244	59	페루	리마	84
28	호주	시드니	1926	60	미얀마	양곤	78
29	콜롬비아	보고타	1920	61	케냐	나이로비	54
30	터키	이스탄불	1891	62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2
31	파나마	파나마	1881	63	사우디	리야드	5
32	스위스	취리히	1873				

<표 22. 계속>

평균			
전 세계(서울 제외)	4486	아시아·대양주	1105
아시아(일본 제외)	940	북미	17384
유럽	8751	서유럽	10493
일본	722	중국(홍콩 제외)	664

주: 2007년 기준 환율을 적용한 가격을 지수화(서울=100)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및 KOTRA 세계 주요도시 물가조사 데이터베이스

동해자유무역지역, 군산자유무역지역, 대불자유무역지역 및 마산자유무역지역 네 곳이며, 분양용 면적은 156만㎡에 그쳐 전체 면적의 5.5%에 불과하다. 또한 임대용 산업단지 공급의 정책적 목적이 임대용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저가의 용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토균형발전 등과 같은 것이어서 수요가 높은 수도권지역에는 전혀 공급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단지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임대용 산업단지의 공급마저 부족하여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입지 관련 직접비용이나 기회비용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높은 입지관련 비용은 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해 결국 국제경쟁력 저하와 고물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방안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2008)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토지공사에 ‘랜드뱅크(Land Bank)’를 설치하여 산업단지용 토지를 사전에 저렴하게 확보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2~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여 사업기간 중 지가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지가의 상승이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시도라 할 수 있겠다. 또한 2017년까

지 국유지를 활용해 임대용 산업단지를 약 3,300만㎡를 공급한다는 계획 역시 적절한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산업단지라는 재화는 공급과 수요가 동일한 지리적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재화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전체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낮추고 임대용 산업단지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역시 중요하다. 즉 상대적으로 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수도권지역에 대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산업단지 분양 및 임대용 산업단지의 공급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재료비

<표 23>은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로부터 산출한 재료비 인상률의 국제 비교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0년 이후 재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3%로 비교가능한 국가 28개국 중에서 9위를 하였다. 이례적인 재료비 상승률을 보인 브라질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들은 멕시코, 인도, 노르웨이 등이다. 대부분의 서유럽국가와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재료비 상승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재료비 상승률이 연평균 2% 내외로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증가율의 상승을 보인다.

한 가지 주목을 끄는 부분은 제조업 생산원가 중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제조원가 중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

표 23. 재료비 연평균 변동률 국제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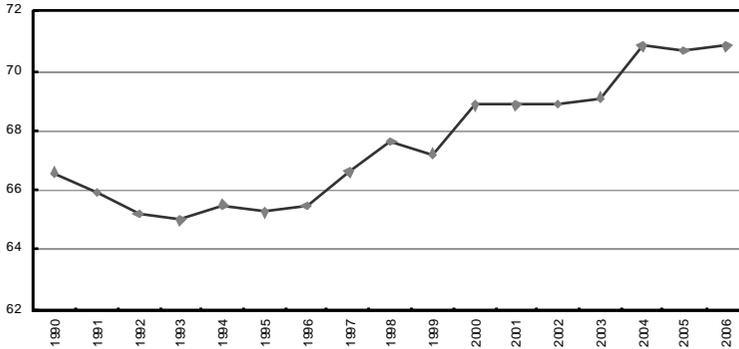
순위	국가	1990~2007	1990~1994	1995~1999	2000~2004	2004~2007
1	브라질	480.34	1690.95	18.79	17.09	3.99
2	인도네시아	14.07	5.90	28.09	8.14	14.22
3	멕시코	13.26	13.83	24.06	6.95	4.82
4	필리핀	7.70	4.12	5.95	9.61	8.65
5	인도	6.68	10.48	5.54	5.18	4.76
6	태국	4.16	2.81	4.51	3.76	6.48
7	말레이시아	3.49	2.47	3.59	2.89	6.05
8	노르웨이	3.19	1.24	1.95	2.40	9.79
9	한국	3.00	3.09	4.37	1.91	2.36
10	이탈리아	2.94	3.37	2.18	2.42	4.35
11	스웨덴	2.71	3.16	1.53	2.22	4.77
12	스페인	2.61	2.36	1.82	2.54	4.50
13	미국	2.46	1.43	0.84	3.22	5.60
14	뉴질랜드	2.44	2.28	0.69	2.93	4.81
15	호주	2.43	2.35	0.17	2.97	5.41
16	영국	2.37	4.24	1.59	1.05	2.77
17	네덜란드	1.90	1.13	1.23	2.80	2.81
18	캐나다	1.81	1.88	2.14	1.42	1.81
19	핀란드	1.70	1.81	-0.04	1.65	4.51
20	덴마크	1.67	0.30	1.16	2.07	4.11
21	벨기에	1.55	-0.96	1.45	3.06	4.28
22	독일	1.49	0.73	0.06	1.86	4.03
23	오스트리아	1.36	0.88	-0.14	2.35	3.01
24	아일랜드	1.15	1.00	0.95	1.07	2.24
25	싱가포르	0.86	-2.30	-0.39	2.83	4.94
26	홍콩	0.63	2.00	-0.21	-0.43	1.98
27	스위스	0.39	0.87	-0.96	0.43	1.75
28	일본	-0.26	-0.31	-0.96	-0.78	1.87

주: 재료비 변동률은 각국의 생산자물가지수로부터 계산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8.

그림 23.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원재료비의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호

<그림 23> 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에서 65%로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생산자물가지수에 근거한 재료비의 증가율이 크게 상승한 1990년대 후반을 시작으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2004년 이후 7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원재료의 가격 상승률은 11.3%로 중간재 가격 상승률 2.5%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특히 2000년 이전 중간재 가격 상승률이 평균 3.5%이었음을 감안하면 원재료가격 상승이 제조업 생산원가 중 원재료비 비중의 증가를 유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0년 이후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률은 13.0%로 국내 원자재가격 상승률 3.5%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원자재 중에서도 수입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원가 중 원재료비의 비중을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비용구조는 국제 원자재가격 변화에 취약한 특징을 가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재료비의 가격 상승은 지난 1990년대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아 가격 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최근에 들어 원자재, 특히 수입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기인하여 제조업 생산원가 중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물가 상승압력은 2007년 중반 이후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외부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이 강하다고 보겠다. 현 상황은 단기적인 정책도 필요로 하지만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조업 비용구조를 개선하고 원자재 수입원의 다변화 및 국제 에너지원의 확보를 통한 에너지 관련 원자재의 수급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기회일 것이다.

(4) 금융비용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많은 개혁을 이루었으며 기업들 역시 재무구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로 1997년 400%에 육박하던 제조업 부채비율은 2006년 100% 수준으로 떨어져 괄목할 만한 향상을 보여 주었다. 금융시장 규제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현 시점에서 금융비용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실제로 금융비용 부담의 인하로 이어지고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하여 물가 상승압력이 완화되었는지를 판단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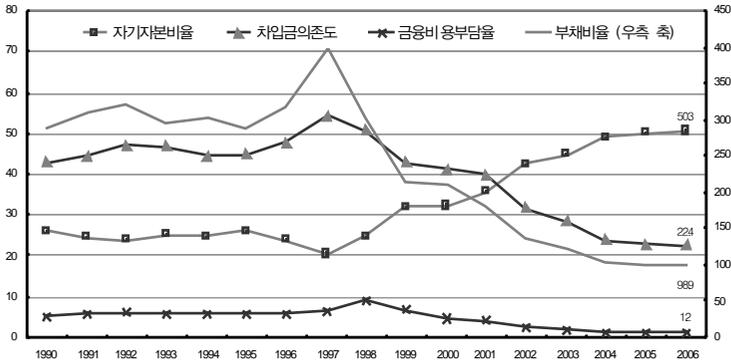
우선 회사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과거 우리나라 실질시장금리(회사채 수익률 기준)는 미국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우리나라 평균 회사채 수익률은 14.01%로 미국의 7.72%에 비하면 상당

히 높은 수준이었다. 높은 금리는 물론 자금부족에 기인한다. 하지만 거기에 각종 금융규제 및 금융시장의 시장메커니즘을 저해하는 요소가 추가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지배적이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은 평균 회사채 수익률을 훨씬 웃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업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회사채 수익률은 크게 감소하여 2000년대 평균 6.08%에 머무르고 있으며 미국과의 차이도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따라서 지난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 기업의 금융비용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재무구조 역시 외환위기 이후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 <그림 24>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재무구조와 금융비용 부담률을 보여주는데 모든 항목에 있어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 300%에 가까웠던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직전 400%에 육박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6년에는 98.9%에 불과하다. 같은 맥락에서 자기자본비율도 1990년 25.9%에서 2006년 50.3%로 개선되었으며, 차입금의존도도 1990년 42.8%에서 2006년 22.4%로 개선되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총이자 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금융비용 비율은 1990년대 초반 5~6%대에서 외환위기 직후 9.0%까지 상승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 하락을 거듭하여 2006년에는 1.2%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나라 제조업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이루어 왔다. 그 결과 금융비용 부담률 역시 크게 하락하였고 2006년 현재 수준은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여 대등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그림 24. 제조업의 재무구조 및 금융비용 부담률

(단위: %)



주: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본
 부채비율=(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금융비용 부담률=이자비용/매출액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호

결론적으로 지난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의 결과로 금융비용 부담이 현저히 감소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원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 역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지난 10년간 모든 항목에서 개선을 보여 왔으나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며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1997년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20% 내외 수준이었으나 2006년 53.9% 및 43.0%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1997년 중소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46.8%로 대기업의 56.5%에 비해 낮았지

만 2006년 역전되어 중소기업 30.9% 및 대기업 18.1%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어 왔으나 평균적으로 보면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높은 금융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신용평가기능을 강화하고 한계기업정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 등을 포함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감소를 위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유통부문

(1) 서론

물가 상승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 수반되는 정책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정책 선택 이전에 물가 결정의 미시적 여건인 유통구조의 이해가 필요하다. 가격은 시장에서 제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곳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산자 단계에서 출하된 가격이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각 단계마다 새로운 가격이 부과되어 최종 단계인 소비단계에서 가격 형성이 완료되는 것이다. 재화의 유통단계의 기능적 여건(유통구조)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야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생산의 혁신을 통해 생산자 가격을 매우 낮추었다고 할지라도 유통구조가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유통마진 상승으로 인해 최종단계에서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유통시장 개방 이후 유통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였고, 제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대형마트·홈쇼핑과 같은 신업태가 등장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유통구조의 개선은 상품거래비용 하락을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 유통구조의 변화와 물가의 관계를 보면, 유통구조 규모화의 대표적인 대형 할인점이 1% 성장하면 소비자물가는 0.0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통구조의 변화가 소비자가격을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가 안정 기여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내

유통구조가 여전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2007년 농산물 유통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한우의 중간 유통마진이 약 40%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내 유통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일 것이다.

(2) 유통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물가와 연관하여 갖는 국내 유통구조의 특징은 크게 저생산성, 도매기능의 취약, 제조업 주도형 유통구조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국내 유통시장은 유통시장 개방으로 인한 신업체의 출현과 업체태의 고도화로 인해 유통 혁신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통구조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 유통산업의 생산성은 타산업과 비교했을 때 2006년 기준으로 전 산업의 평균 이하로 그리고 농림어업보다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4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도 국내 유통산업의 노동생산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업의 저생산성은 업체의 영세성, 경영의 전근대성, 낙후된 상거래 관행, 그리고 취약한 유통정보화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결국 이는 유통비용 증가 및 저생산성의 결과를 낳고,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현재 우리나라 유통업은 도매업이 취약한 소매업태 위주의 구조로 되어 있다. 유통시장 개방 이후 소매업태와 달리 도매업태의 발달이 잘 이루어지 않아 유통구조가 취약한 편이다. 유

통우회도를 통해 살펴보면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낮게 나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통우회도가 낮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유통과정이 일본 또는 미국에 비하여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도매업체는 규모가 영세하여 전문화가 미흡하고 그 기능이 미분화되어 있어 제조업체가 도매 서비스를 대체하여 왔기 때문이다.

세 번째 특징은 다양한 유통업태가 등장하여 유통업체가 점차 유통경로상에서 힘을 가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형 제조업체는 여전히 계열화된 대리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조업 주도의 유통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주도형 유통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업체가 가격 결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중간상인들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의 경직성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통구조는 거래관행에 의한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비효율적 거래 관행으로 ‘희망소매가격’, ‘판매장려금’ 등이 있다.

희망소매가격은 마케팅의 가격정책인 재판매가격 유지정책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정책은 가격의 제조업체 간의 가격 담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유통업체의 진입을 막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하며,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 형성을 왜곡시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희망소매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

판매장려금은 일종의 리베이트와 같은 형식으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판매 확대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내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판매장려금은 소

비자가격의 인하로 연결되기보다는 주로 유통업체의 이익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제조업체에 비용전가를 시키고 있어 소비자와 제조업체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3) 주요 품목별 유통구조와 소비자가격 간의 관계

의류는 대리점을 통한 유통비율이 1993년에 80%에서 2000년에는 10%로 감소하면서 제조업 주도형 유통구조에서 판매업 중심의 유통구조로 변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류 유통구조는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한 유명 브랜드 의류업체가 전속 대리점을 통해 유통을 계열화한 것이 전통적인 의류 유통방법의 하나였으며, 의류 판매는 주로 재래시장, 백화점, 그리고 대리점이라는 유통채널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전속 대리점 체제하의 유통구조하에서는 생산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악성재고의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가격에 위험프리미엄을 붙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이러한 정상가격으로 판매되고 남은 재고에 대해서는 세일판매를 통해 처분하는 반복 현상이 고착되었다. 그러나 유통시장 개방 이후 새로운 유통구조는 유통경로의 단순화,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그리고 재고 소진의 용이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유통구조의 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의류의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폭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조업이 주도하는 유통구조, 즉 대리점에 의해 100% 유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유통채널

이 다양화하지 못하고 제조업 주도의 수직 계열화된 유통구조를 갖게 되어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통구조하에서 소비자들이 차량 구입시 차종에 대한 선택만 있을 뿐, 동일한 차에 대해서는 가격의 차이에 따른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직계열화된 유통방식은 경쟁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자제품 유통구조는 과거 제조업체 주도로 계열화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제조업체가 중간 유통업자를 개입시키지 않고 판매 또는 유통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사의 직영점 또는 판매 대리점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최근에는 힘의 원리에 의하여 유통구조의 핵심이 대형 유통업체, 즉 대형마트와 전자전문 양판점으로 파워시프트(Power Shift)되면서 가격정책에 있어서도 대형 유통점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할인마트와 양판점의 경쟁구도에서 전자제품의 가격은 하향 동조화되고 있다.

농산물의 전형적인 유통경로는 생산자→산지수집상(생산자단체)→도매상→소매상→소비자였으나 최근에는 대형 유통업체로 인해 생산자→산지수집상(생산자단체)→대형 유통업체→소비자, 또는 생산자→산지수집상(생산자단체)→도매상→대형 유통업체→소비자의 새로운 유통경로가 등장하였다.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유통경로가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유통비용도 전형적인 유통경로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유통단계의 축소로 인하여 중간상인들의 이윤극대화 행위가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인 유통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통비용(마진)의 감소는 중간

단계의 이윤 및 유통경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으며, 각 중간단계의 비용과 마진의 감소는 곧 소비자가 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4) 유통구조의 변화와 물가 관계에 대한 시사점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했던 국내 유통산업은 유통시장 개방 이후 급속한 발전을 하였다. 유통산업의 발전은 대형화된 유통업체들이 등장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며, 이러한 대형화를 바탕으로 제조업이 지배하던 유통의 주도권이 유통업체에 넘어가는 구조적 변화로 나타났다. 이런 유통구조의 변화로 유통단계가 축소되고, 유통업체가 가격의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일련의 변화의 과정을 통해 유통의 비효율성과 저생산성이 감소되고 있다. 유통의 비효율성과 저생산성의 감소는 소비자에게 더욱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유통구조하에서는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현재는 희망소매가격이라 함)을 정해 놓으면 소매점은 이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유통구조하에서는 제조업체가 제조원가로 출하하면 각 단계별로 유통마진이 붙어 최종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오픈가격체제(Open price system)가 되면서 더 이상 제조업체가 소비자 판매가격을 주도할 수 없게 되었다. 유통업체가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서 가격의 경직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대형마트와 같이 대량 구매를 하는 유통업체는 소비자가격을 더 낮추어 고객들을 더 유치하려는 영업 과정에서 제조업체에게

납품가격 인하 요구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갈등을 낳기도 하였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Private Brand: PB)상품을 출시하였다. PB상품은 유통업체가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품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제조업체와 협력 또는 제조업체에게 위탁하여 자사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다. PB상품은 광고와 같은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원가 절감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여 기존의 제조업체 상품(National Brand: NB)보다 20% 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결국 PB상품은 유통업체에게 가격 결정권을 확대하는 수단을 제공하였다.

유통구조의 변화는 업체들 간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유통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소매가격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 중·소매업체와 제조업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도매기능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다. 신업태를 중심으로 국내 유통업이 규모화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영세한 중·소매업체가 전체 유통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제조업체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도매업체의 원활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제조업체가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직접 영업활동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유통비용을 발생시킨다. 역으로 소매업체가 제품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다수의 제조업체에게 개별적으로 주문하는 것 또한 엄청난 유통비용을 발생시키며 유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도매업체는 이런 수집과 분산 기능을 통해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도매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이 유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매기능에 대해 불필요한 유통단

계를 늘려 유통비용을 늘렸다는 시각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 영세한 도매업체로 도매기능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로 유추된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규모화된 도매업의 출현과 성장이 필요하며 이는 유통비용을 낮춰 소매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제조업체 주도하는 유통의 수직적 계열화 구조는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자동차와 같은 일부품목에서는 여전히 수직적 계열화 유통구조가 우세하고 있다. 이는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특히 희망소매가격과 같은 가격표시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간의 담합 또는 제조업체 간의 암묵적인 협조를 통해 새로운 유통업체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진입장벽과 불공정 행위를 제거하고 유통업체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새로운 유통구조 속에서 점차 제조업체보다 유통업체의 힘이 커짐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사례(판매장려금, 판촉비, 신상품 촉진비, 물류 장려금, 무반품장려금, 상품권 구입 등)들이 등장하고 있다.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들은 제조업체에 비용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유통혁신을 통해 유통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 결과로써 판매가격 인하가 아닌 제조업체에 비용부담을 전가시킨 결과라면, 부메랑이 되어 결국 유통업체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제조업체를 파트너로 생각하며, 혁신을 통한 비용절감이 소비자, 유통업체, 제조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유통산업이 시장개방과 함께 성장을 하였음에도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유통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유통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규제를 포함한 불합리한 제도적인 문제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다. 무엇보다도 유통업체의 입지제한 측면에서는 국토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의 합리적인 기준 위에서 입지제한은 더욱 완화되어야 한다. 진입장벽은 최대한 없어야 하며, 진입장벽의 근거가 더욱 분명해야 하며, 소비자 후생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이 아닌 신고를 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이 등으로 등록기간의 지체가 빈발하여 점포개설 업무에 큰 차질이 초래되고, 또한 많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는 해소되어야 한다. 또한 철폐되어야 할 규제 중 하나가 약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의 판매 금지이다. 가정상비약인 소화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사용법이 잘 알려져 있는 단순의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는 이미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고 있음에도 아직 국내는 규제에 묶여서 자유로운 유통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통규제는 일반의약품의 가격 상승과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유통규제인 것이다. 향후 이러한 불합리한 유통규제는 개선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규제의 개선이 궁극적으로 물가 안정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세제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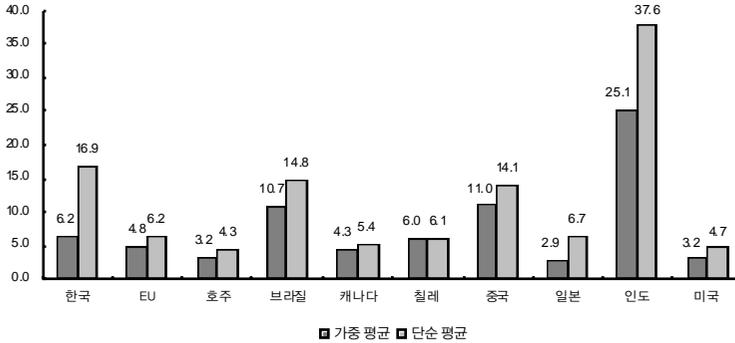
(1) 주요국의 관세율 비교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일반품목 리스트에 포함된 141개 교역제와 HS 6단위 기준 5,224개 품목군의 단순평균 관세율과 품목별 수입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관세율을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10개 국가로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일본, 인도, 미국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EU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2006년 품목별 수입통계자료와 관세율 자료를 사용하였다. EU의 경우 2007년 자료가 가용하여 2007년 수입금액과 관세율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2005년 품목별 수입통계자료만 가용하여 2005년 수입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전체 관세율은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10개국 중에서 높은 편이다. 일반품목 리스트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단순평균 관세율은 16.9% 수준으로 10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고, 수입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관세율은 6.2% 수준으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중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관세율의 절대수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HS 6단위 품목군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도 한국의 단순평균 관세율과 가중평균 관세율은 모두 인도와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EU 등 주요 선진국보다 관세율의 절대 수준도 3~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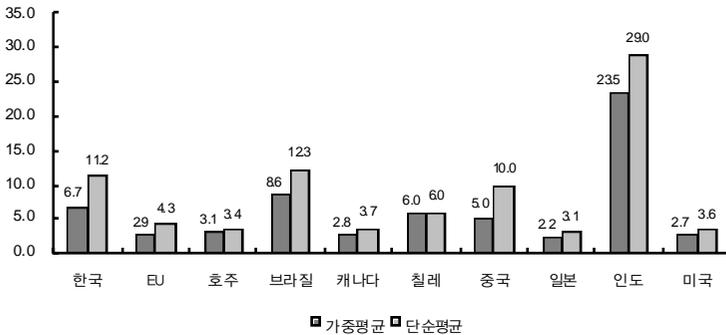
| 그림 25. 관세율 비교: 일반품목 리스트 기준

(단위: %)



| 그림 26. 관세율 비교: HS 6단위 기준

(단위: %)



일반품목 리스트와 HS 6단위 품목군을 각각 5개와 15개의 세분류 품목군으로 다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산품보다는 1차 산업 품목군과 음식료 및 담배 품목군의 관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이 식물성 생산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가중평균 관세율은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매우 높은 153% 수준으로, 이는

식물성 생산품의 최저 가중평균 관세율을 보인 호주에 비해서 거의 15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광물성 생산품에 대한 가중평균 관세율은 3.84%로 전체 관세율인 6.7%보다는 낮지만 광물성 생산품의 수입비중이 전체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광물성 생산품에 대한 관세율보다는 각각 3배와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비중이 각각 7%, 11%, 27% 수준인 화학 또는 연관공업제품, 금속제품,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 품목군의 관세율은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네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금속제품을 제외하고 화학 또는 연관공업제품과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 품목군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보통 두 배 정도 더 높다. 특히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일본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0.08%으로 3.3% 수준인 한국과 크게 비교된다. 음식료 및 담배와 함께 섬유제품, 신발 및 모자류 품목군에 대한 관세율은 한국 전체 관세율을 크게 초과하는 고관세 품목군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과 신발 및 모자류 품목군의 관세율은 비교대상 국가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품목군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은 평균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에 비해 관세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관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세계화로 인해 재화와 용역의 이동에 있어서 국경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부합하고 해외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물가 상승압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세율 체계 개편에 있어서 다음의 네 가지 요인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석유류를 포함한 광물성 생산품의 경우 한국의 관세율이 비

교대상 국가들 중 서너 번째로 높다는 점, 특히 주요 비교대상 국가들은 원유 수입에 대해 대부분 무세를 적용하거나 무세에 가까운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3%를 적용한다는 점은 해외요인에 의해 급등한 원유가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광물성 생산품에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해외요인의 악화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물성 생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더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물성 생산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체계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식물성 생산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한국에 있어서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식물성 생산품의 수입비중이 전체 수입의 2% 미만이라는 점은 이 품목군의 관세율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농림어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60~70년대에 비해 매우 낮아져서 2007년 현재 3.2%에 불과하므로 농림어업 생산자의 입장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현행의 고관세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 선진국의 관세율보다 2~3배 정도 더 높은 화학 또는 연관공업제품 품목군과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 품목군의 관세율을 물가 안정차원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 품목군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국내산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다소 훼손할 우려도 있겠으나, 부품의 수입가격 인하효과와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음·식료 및 담배와 함께 섬유제품, 신발 및 모자류 품목군에 대한 관세율은 한국 전체 관세율을 크게 초과하는 고관세율 품목군이다. 섬유제품과 신발 및 모자류 품목군의 관세율은 비교대상 국가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평균 또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지만, 이들 품목군은 일반국민들의 생활물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물가 안정차원에서 관세율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주요국의 소비세제 비교 및 시사점

1) 부가가치세

OECD 회원국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29개 국가에서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는 각 국가마다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부가가치세 세율과 면세 및 국내 영세율 범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낮은 수준인 10%의 단일세율 체계를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OECD 회원국이 적용하고 있는 표준세율의 평균은 17.5%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25%의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들은 덴마크, 헝가리,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이다. 5%의 가장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면세범위와 국내 영세율 범위를 운용하며 단일세율을 유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잠식이 여타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뉴질랜드보다는 비효율적이지만 한국의 C-효율성지수는 OECD 평균 이상으로 나타

났다. 2005년 뉴질랜드와 한국의 C-효율성지수는 각각 92.9%와 66.7%로 추정되고 C-효율성지수의 OECD 평균은 54.5%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의 면세 범위는 OECD의 표준면세 범위보다도 훨씬 좁고 10%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 영세율과 기타 경감세율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잠식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작고 평균 실효세율과 법정 표준세율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한국에서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와 비교하여 면세대상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거래의 범위가 넓어져서 부가가치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 비교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최상은 아닐지라도 한국은 부가가치세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낮은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현재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물가상승압력에 미치는 부가가치세제의 영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제가 향후 더 효율적인 일반소비세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면세 및 영세율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세수 중립적으로 세율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면세 및 영세율 범위를 축소 및 세수 중립적 세율인하는 국내 재화의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원자재에 부과되는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인하로 인해 수입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재화의 가격 인상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 품목별 개별소비세제 국제 비교

과거 한국의 경우에는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자 전자제품 등 고가의 사치품에 무거운 세금을 특별소비세의 형태로 부과하기도 하였으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치품에 대한 정의가 변화됨에 따라 과거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었던 가전제품과 같은 많은 품목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특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로 이름을 바꾸고 사행성 오락용 기구나 200만 원 이상의 고급시계나 사진기, 자동차, 경마장이나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 교통·에너지·환경세목으로 석유류 제품 소비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으며 주세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주류, 석유류, 담배, 그리고 자동차 취득등록단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제의 국제 비교를 통해 도출된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은 향후 개별소비세제 개편 방향에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주세의 경우 독주로 분류되는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의 세율인 72%가 알코올 함유량이 훨씬 낮은 맥주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소주와 위스키의 알코올 함유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율이 공장출하가격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와 직접비교가 가능한 세율체계를 갖고 있는 멕시코는 알코올 함유량과 주종에 따라 25~50%의 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독주 위주의 음주문화가 지배적인 한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알코올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은 맥주의 알코올 함유량에 대해 누진적 세율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비교대상 국가들은 제품가격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알코올 함유량

에 따라 특정 금액을 주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세 부과방식은 같은 수준의 알코올이 함유된 동종의 주류에서 값이 싼 제품의 상대가격을 높이고 양질의 고가 제품의 세후 상대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가 건강에 좋지 않은 값싼 저질의 주류 생산을 억제하는 데 있다.

각국의 2005년 세법을 기준으로 비교한 석유류에 대한 소비세액 규모나 2007년 4분기 이후의 자료를 중심으로 석유류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종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소비세가 한국에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되는 석유류에 대한 관세와 함께 높은 소비세 부담은 물가 상승압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7년 4분기 이후 무연휘발유, 경유,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세금부담이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5.7%, 47%, 19.3%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52%, 43.2%, 16.6%를 상회하며 각 유종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세금 부담 비율을 보인 국가들보다 4배 정도 더 높다는 점은 향후 세계 개편방향에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담배가격 2,500원 중에서 약 63%에 달하는 1,566원이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먼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담배 한 갑에 각각 641원과 321원씩 부과되고, 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연초안정화기금 15원이 부과되고 있다. 흡연인구가 많은 유럽 국가들의 담배가격 대비 세금비율과 비교한 결과, 63% 수준의 소매가격 대비 한국의 담배소비세 및 관련부담금 비율은 EU 회원국의 평균 비율인 75%를 크게 하회하며 27개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소매가격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하려다 철회됐던 정부의 계획은 향후 물가가 안정되는 등 여건 조성과 함께 다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취득 및 등록에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공채 또는 지역개발공채를 지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서울지역에서 2,000cc급 신차를 취득 및 등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비율이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을 즉시 할인매도하는 경우 2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7개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열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서는 일반소비세 또는 주정부 소비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나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뿐만 아니라 차량등록 시점에서 강제적으로 도시철도공채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어서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높은 취득 및 등록단계의 세금부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자가격을 높이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중한 취득 및 등록단계의 세 부담 이외에 매해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취득단계의 세금부담 수준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 취득 및 보유관련 세제는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공채매입제도의 개선과 함께 최근 EU위원회에서 고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 운행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관련세제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물류부문

(1) 국내 물류비 현황

우리나라 물류비의 연차별 흐름을 파악하고, 외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는 국가물류비와 기업물류비가 있다. 이들 물류비를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는 기업물류비, 국가물류비 공히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물류비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그 감소 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물류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국가 혹은 기업 차원의 물류비 절감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계산방식이 유사한 한국과 일본의 두 지표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GDP 대비 국가물류비,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모두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 비해 한국이, 국가나 기업 모두 물류비라는 비용요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동일한 산업분야에서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물류비의 기능별 비중을 특히 일본과 비교할 경우 재고유지관리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송비의 비중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송비의 경우도 두 국가 간의 국토공간의 차이 등 외생

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수송비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다시 한국의 물류비, 특히 주요 두 항목인 수송비와 보관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서 국가물류비와 기업물류비를 막론하고, 우리나라는 수송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고유지관리비(보관비)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물류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재고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수송비의 절감 측면에서는 국내의 수송수단 선택 및 네트워크에 심각한 애로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측케 한다. 특히 수송비 비중의 증가속도가 전체 물류비의 감소 속도보다 높다는 것은 수송비가 상대적인 비중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단위비용 측면에서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같은 기간 동안 수송비 비중 추이가 안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더욱 우리나라 수송구조상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국내 물류비 발생의 원인

우리나라 물류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특히 수송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물류비 증가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송비의 비용 발생요인

첫째, 국내 화물운송업은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화물수송을 주

로 비영업용 트럭에 의한 도로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국내 비영업용 트럭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수송거리가 짧고, 수송비는 높으며, 수송효율성도 영업용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국내 화물수송비의 비중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영업용 트럭의 수송효율성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평균 수송중량 및 수송횟수가 낮아 트럭의 가동효율이 매우 떨어진다.

넷째, 영업용 트럭의 또 다른 문제는 화물운송거래단계가 복잡해서 화물수송을 위한 거래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거래비용을 높이는 원인은 지입제로 인해 화물트럭 수송정보와 수송수단 간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7년 3분기의 영업용 트럭의 지입료 및 주선료 수준은 트럭의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전체 지출액의 10~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재고유지관리의 비용 발생요인

첫째, 국내 물류시설들은 전체적으로 시설 이용 측면에서 비교대상인 일본에 비해 현저한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전체 시설면적 중 화물보관에 이용하고 있는 면적을 표시하는 시설의 이용률도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단위면적당 처리 화물의 규모도 매우 낮다.

둘째, 인력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단위면적당 인력 투입률이 일본에 비해 매우 높아서, 시설 이용까지 고려한 1인당 화물처리효율이 일본의 7%에 불과한 실정이다.

셋째, 이렇게 단위 화물당 시설 및 인력의 투입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화물의 파손, 손상, 분실 등의 비율은 일본에 비해 높다. 이는 화물의 수송 및 보관과정이 매뉴얼화되어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기타 비용 발생요인

첫째, 한국은 자기물류활동의 비율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 특히 3자물류의 비중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거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의 물류산업이 전문화되지 못하는 원인이자 결과로 해석된다. 자기물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3자물류를 위한 시장이 확대되지 못하여 전문 물류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전문 물류기업의 성장하지 않아, 제3자에게 화물을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3자물류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물류활동의 전문화 및 물류기업의 대형화가 이뤄지지 못해서 비용이나 기술적으로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물류표준화율은 표준화의 진척도가 높은 호주나 유럽은 물론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우리 물류분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3) 국내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정책대안

1) 공급사슬 최적화 모델의 개발

공급사슬의 최적화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최종소비지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수송경로를 확보하고, 최적의 물류거점입지를 선정하는 것과 더불어 유통경로를 최대한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시스템의 개선인 것이다. 이 중에서 물류비용을 가장 쉽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유통경로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물류거점 경유비중을 낮추고, 각 링크별 수송경로를 최적화하며, 각 노드의 입지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화물품목별 유통경

로를 확인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 물류 관련 조사 및 통계에서는 화물의 유통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이 배제되어 있다. 일부 기관에서 간헐적이고 부분적으로 개별 품목 단위로 유통경로 분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유통경로의 유형을 분석하고, 각 링크 및 노드별 소요시간 및 비용, 그리고 처리화물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대체가능한 공급사슬 간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조사는 개별 기업 단위에서는 자기 기업의 공급사슬을 최적화하려는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공급사슬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다. 공공의 정책으로 이러한 조사와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전문 물류기업의 육성

공급사슬의 최적화가 물류활동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을 최적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문 물류기업의 육성은 물류활동 주체들의 주관적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전문 물류기업에 의한 물류활동의 비중이 물류 효율화의 기준이 되는 이유는 문자 그대로 기술적 전문화와 비용적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이다. 하주기업이 생산활동과 파생 물류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보다는 하주기업은 본연의 생산활동에 주력하고, 물류활동은 전문 물류기업이 수행했을 때, 물류활동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의 축적이 심화되어 기술적인 효율성이 나타나고, 또한 전문 물류기업의 활동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의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도 2006년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전문 물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시행 3년째에 접어든 2008년까지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의 숫자는 30개에도 미치지 못하여 전체 물류기업의 0.02%에 불과하고, 인증받은 물류기업들의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제도를 통한 구체적 실익이 없다는 점, 인증기준 자체가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물류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특히 제휴를 통한 인증의 경우 형식적인 제휴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대안을 수립하기보다는 기존의 종합물류기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인증기업 또는 인증기업 위탁 하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의 제공은 물류시장의 확산 및 물류기업의 전문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3) 물류기업의 대형화

현재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업의 97.8%가 9인 이하의 영세한 규모인 반면, 300인 이상의 대규모는 전체의 0.05%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9인 이하의 운송업체는 1999년 이후 연평균 15% 내외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999년까지 진행된 규제완화를 통해 중형 이하의 법인기업체들은 자가 소유 화물차의 매각을 통해 위·수탁경영체제(지입차량 경영체제)로 전환하는 반면 상당수의 생계형 개별사업자와 용달화물업자, 그리고 일반화물에 숨어 있는 지입차량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류업 특히 화물운송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꾀했던 1999년까지의 정부의 정책이 사실

상 실패로 귀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화물운송업뿐만 아니라 창고업과 같은 물류시설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류기업의 대형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전근대적인 지입제의 해소와 영세기업의 M&A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의 적극적인 제공이다. 지입제도는 생계형 개인사업자의 운송시장 참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합법화되었지만, 현재는 중대규모 공로운송업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하지만 지입제도의 갑작스러운 폐지는 시장의 혼란 및 생계형 운수업자의 도태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기업들이 기업규모를 대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지입차량이 기업의 틀로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기준 있는 등록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운송시장에 대한 진출입을 최대한 자유화하되, 기업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입제를 통한 ‘위·수탁경영’이 아닌 직접경영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를 가진 기업들은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지입차량들이 조합 형태를 통해 대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이미 가맹사업이라는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화물거래단계의 축소

화물거래단계의 축소는 지입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트럭운송업의 효율화를 위한 최대의 과제이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화물운송정보의 거래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소수의 관 주도형 시범사업은 오히려 민간의 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의지를 꺾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민간의 운송정보거래사업 참여에 대한 각종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오히려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다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정상적인 화물운송정보 거래시스템이 정착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부 민간기업에 의한 시장참여는 이런 점에서 고무적이다.

화물거래단계의 축소를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대안은 개별 차주들의 공동 운송 및 알선을 위한 조합의 결성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다만 계 알선은 현 시장구조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단속에 의한 개선은 그 실효성이 적다. 따라서 전국 또는 지역별, 그리고 사업영역별 운송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아이치현의 화물 자동차운송사업협동조합, 기후현의 중앙운송사업협동조합 등 지역 단위로 운송 및 알선의 조합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5) 보관 및 재고관리비 절감

재고유지관리, 특히 보관에서 비용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물류시설 공간 이용의 비효율성과 인력투입의 비효율성이다. 실제로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하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에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단선적으로 표현하면 공간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고 인력투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류의 표준화 및 기계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보관 및 재고유지 관련 전문기업의 부족으로 하주기업들이 자가물류창고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한정된 화물과 규격화된 물류창고 사이의 괴리, 더 나아가 효율적인 물류관리 소프트웨어의 부족이 공간이용의 비효율성을 낳은 것이다. 따라서 화물 규모와 창고 규모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방안은 동종 업종 간의 물류시설 공동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주기업의 자가물류시설의 영업적 이용에 대한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고, 물류시설 운영사업자의 공동화 운영에 대한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인력투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와 기계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표준화에는 국제표준을 설정해야 하는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기계화에는 대규모의 초기투입자금의 소요라는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은 국제표준화사업의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물류업의 현실적 요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표준화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계화를 위해서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에 대한 파이낸싱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